

박근혜의 뿌리

박정희의 유신쿠데타 40년

▶ 4~5 면

다시 듣는 맑시즘2012

대선과 사회주의자의 관점

▶ 8~9 면

미국 대선

〈가디언〉 칼럼니스트 개리 영 인터뷰

▶ 10 면

제주 해군기지

동아시아 영토 분쟁의 또 다른 뇌관

▶ 7 면

추도사

저항의 역사가 에릭 홉스봄

▶ 13 면

발행인_최성호 편집인_최성호
인쇄인_주아아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서울다08179 (격주2)
등록연월일_2009년 1월 12일
주소_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_02-777-2792 팩스_02-6499-2791
제보_02-777-2791 E-Mail_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41

Left21.com

제90호 | 2012년 10월 8일 ~ 10월 21일 | 값 1,800원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 | 노동자 연대

레프트21

저항으로 드러내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도 준비하자

관련 기사 2 ~ 3면



흔들리는 박근혜를 더 두들겨라

관련 기사 4 ~ 5면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 신청 : 02-777-2792,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 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누구의 말일까요?

“자살률 증가는, 공짜와 무책임과 불평 불만을 가르치는 종북 좌파 이념의 확산과 관계 있다고 보는 게 더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닌가?”

우파 조갑제

“죽음은 그 하나하나가 귀중한 것인데 나머지 죽음은 숫자로만 거론됐다.”

공지영 <의자놀이>에 대한 <동아일보>의 꼬투리 잡기

“동성애자가 주인공인 드라마를 보면 동성애자가 되는 걸 부추킨다니, <티브이 동물농장>은 개가 되는 걸 부추기겠네.”

우익들의 호모포비아에 대한 한 네티즌의 일침

“꺼져! 이 멍청한 부자 녀석!”

부유세 피해 이민 간다는 루이뷔통 회장을 비판한 좌파 언론 <리베라시옹>의 헤드라인

“박정희는 천상에서 인혁당 8인에게 사죄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막걸리를 마시며 조국을 애기하고 있을 것이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진, 막걸리 먹고 글 썼나?

“문명인과 미개인 간의 전쟁에서는 문명인을 응원하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라!”

미국의 친 이스라엘 우익 단체가 뉴욕 지하철 역에 게시한 광고에서

“국가정체성에 위배된다.”

쌍용차 살인진압 사고 요구에 대한 조현오의 혐오스런 답변

“새누리당 안에 나 같은 민주화 세력이 있다. 우리는 6월 항쟁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김무성의 ‘멘봉’ 발언

“아이 병신 XX들아, 너희가 기자 맞냐. 너희가 대학 나온 XX들 맞냐. 너희가 보고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 들어온다, 녹취록까지.”

임명장 받기도 전에 물러난 새누리당 대변인 김재원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철도노동자 총력 결의대회

10월 13(일) 오후 2시 서울역
주최: 철도노조

돌봄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돌봄노동자에게 노동권을

제 3회 전국돌봄노동자대회

10월 20(일) 오후 3시 30분 보산각
주최: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연맹

노조 설립 정취! 해고자 원직복직! 임금인상!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조건 없는 5, 6급 근속 승진! 정치 자유 정취!
1020 공무원노조 총회

10월 20(일) 오후 2시 잠실종합운동장
주최: 공무원노조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10만 촛불행진

10월 27(일) 오전 10시 시청 앞
주최: 민주노총 비정규투쟁본부

서점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그날이 오면(서울대입), 인사점(건국대입), 풀무칠(성균관대입), 이음책방(대학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통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입)

<레프트21> 온라인

<레프트21> 트위터에 팔로우해 주세요.
@left21twit

<레프트21> 페이스북의 팬이 돼 주세요.
bit.ly/left21fan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www.left21.com



그리스

다시 총파업 공세에 나선 노동자들

9월 26일 그리스 노동자들이 긴축에 반대하는 총파업 공세를 다시 시작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3개월 만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노동조합 모두가 파업에 나서 모든 산업이 멈췄고 아테네를 비롯해 65개 도시에서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그리스 정부는 유럽연합과 IMF 금융지원을 받는 대가로 거의 1백20억 유로에 달하는 긴축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업률이 24퍼센트에 이르고 청년 실업률은 55퍼센트로 유럽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긴축정책은 노동자들에게 더 커다란 재앙만 가져다줄 뿐이다.

그래서 파업에 나선 많은 노동자들이 더 강력한 행동을 벌여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노동조합들은 정부가 새로운 긴축 비준안 표결을 실시할 때 다음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많은 노동자들은 당장 파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파업 바로 다음 날 전력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연맹이 투쟁을 강화하는 결정을 내릴 때까지 48시간 파업을 반복하겠다고 선언했다. 재무부 노동자들은 9월 28일까지 파업을 이틀 더 진행했다.

파업에 참가한 언론 노동자 일리아스는 “우리의 임금과 노동권은 끔찍한 악몽입니다. 오늘 파업은 성공이었지만 투쟁을 강화해야 합니다. 매일 파업해야 합니다” 하고 말했다.

대량해고를 앞둔 의류회사에 다니는 엘레니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금 20년 전에 받았던 임금을 받고 있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더는 못 살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대변하며 투쟁하는 노조입니다.”

그리스 정부는 양쪽으로부터 모두 압력을 받고 있다. 정부는 두 주안에 트로이카에게 새로운 긴축안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 정부는 또한 아래로부터 저항을 무시했을 때 이전 정부들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도 잘 알고 있다.

최용찬

포르투갈

1백만 명이 모여 긴축안을 패퇴시키다

2011년 4월 6일 포르투갈 정부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이후 포르투갈 노동자들은 지독한 내핍을 견뎌왔다.

IMF의 추정을 보면, 포르투갈의 단위 노동 비용(상품 한 단위를 만드는 데 드는 인건비)은 2010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올해 4.5퍼센트 하락할 것이라고 한다.

공식 실업률은 15.7퍼센트이지만 이 수치는 구직을 포기한 노동자들을 뺀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시킬 경우 실제 실업률은 20퍼센트를 넘어선다.

급기야 9월 7일 포르투갈 정부는 노동자의 사회보장 부담액을 임금의 11퍼센트에서 18퍼센트로 인상하고, 기업의 부담액은 거의 6퍼센트를 감면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대중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 투쟁이 한창이던 9월 넷째 주, 리스본 벨렘 궁전 앞 시위대의 깃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그만 됐다. 이제 우리 차례다.”

거리는 “강도들, 강도들”, “이제 강도질은 어렵겠다”, “우리가 너희를 해고하겠다”는 구호로 가득 찼다.

어느 시위자는 포르투갈 민영 방송사인 SIC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들은 부패한 패거리일 뿐입니다. 저들은 강력한 컴퓨터로 그럴싸한 예측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 처지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시위는 2주 동안 지속됐다. 1974년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집회가 열렸다. 단 하루 동안 전체 인구의 10퍼센트가 넘는 1백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포르투갈 노동자총연맹(CGPT)과 노동자총연합(UGT)은 총리의 긴축안에 맞서 총파업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심지어 현 집권 연정의 파트너인 인민당의 당수이자 외무 장관 파울루 포르타스마저 자신이 긴축안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9월 22일 포르투갈 총리 코엘류는 결국 긴축안을 포기했다. 10월 중순에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었던 긴축 예산안은 대중의 반란을 격화시킬 수 있고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반란 표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통과를 장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코엘류는 새로운 긴축안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긴축안은 우선 트로이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포르투갈 노동자들은 이제 긴축 자체를 혐오하고 있다.

천형석



사진 출처: George Loustas (플리커)

9월 26일 그리스 긴축 반대 총파업 아테네에서만 노동자 5만여 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불산 유출 사고

뼈까지 녹이는 독극물이 방치되는 이유

두 청년이 용광로 씻물에 목숨을 잃은 지 한 달도 채 안 돼 이번에는 무려 다섯 명이 맹독성 물질에 온몸에 화상을 입고 숨졌다. 이들 중 두 명은 아직 서른 살도 안 된 청년들이었다. 사고를 낸 휴브글로벌은 LG디스플레이 공장 등에 불산을 납품해 온 회사로 알려졌다.

불산은 LCD나 반도체의 표면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물질인데 인체에는 치명적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발간하는 직업 안전 교육 자료에는 피부의 2퍼센트(손바닥 크기)만 이 물질에 노출되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가 실려 있을 정도다. 미국 정부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불산 농도가 30ppm에 이르면 즉각 대피하라고 경고한다.

살은 물론 뼈까지 녹아내리며 화학무기의 성분으로도 쓰이는 치명적 독극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방호

복도 없이 이 물질을 다루다 죽는 것이 다.

충격적인 항공사진이 보여 주듯이 사고가 난 지 1주일 만에 이 공장 일대는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 버렸다.

주변으로 퍼져나간 불산 가스 때문에 거의 모든 식물이 타들어갔고 가축과 사람들에게서도 급성기 증상이 나타났다. 아무 대책없이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도 피부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며칠 만에 사람 수백 명과 가축 수백 마리가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

화학 무기

당국의 사고 대응은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허술했다. 안전관리대책은 전무했고, 이런 물질이 옆에 있는지조차 몰랐던 주민들은 제대로 대피도 못 했다. 소방서에는 중화제(석회)도 준비돼 있지 않아서 불산을 씻어낸 물이 낙동강으로 대책없

이 흘러갔다.

심지어 정부는 휴브글로벌처럼 위험 물질을 다루는 수천 개의 기업들이 어디에서 무슨 물질을 다루고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OECD가 2000년에 권고한 유독물질 등록제도는 기업들의 반발에 밀려 2010년에야 형식적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보여 주듯이 실제로는 있으나마나한 상태다.

안전 대책 강화가 기업 이윤을 깎아먹기 때문일 것이다. 산재 예방을 위해 투자됐어야 할 돈은 고스란히 기업들의 이윤으로 남았다.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이런 물질의 사용 자체를 강력히 제한하거나 아예 금지할 수도 있다. 이미 불산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물질들이 개발돼 있다. 그러나 여기에 드는 비용이 이윤을 낮추는 게 문제다.

젊은 여성 노동자들이 백혈병으로 죽고, 용광로 전복 사고로 청년들이 목숨을

잃고, 또 다른 청년들이 맹독성 물질을 뒤집어 쓰고 죽어도 삼성, GS, LG는 ‘성장’을 늦출 생각이 전혀 없다.

자본가들은 이번 사고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 불산을 생산하는 국내 경쟁업체인 후성의 주가는 10월 2일 하루에만 5.34퍼센트나 올랐다.

올해 2월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영국계 석유화학기업인 맥스켄과 광양에 대형 불산 생산 공장을 짓기로 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정부의 감시가 아니라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에서는 안전 규제를 강화하자거나 재해 예방 예산을 늘리자는 얘기도 없다. 이 자들은 하루에도 두 번이나 고장이 발생하는 핵발전소라는 시한폭탄도 없앨 생각이 없다.

이 체제의 정신나간 우선 순위는 완전히 거꾸로 세워져야 한다.

장호중



사진 출처: Etkoo (틀리키)

9월 29일 포르투갈 노동자총연맹이 조직한 긴축 반대 파업 집회에 10만 명이 모였다.

반란의 유럽

저항과 함께 급진적 대안도 발전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지배자들은 경제 위기 속에서 허리띠 졸라매기를 거부한다면 국제적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놔 왔다. 그러나 9월 마지막 주에 유럽을 휩쓴 긴축 반대 파업과 시위는 이런 주장에 정면 도전하며 국경을 뛰어넘는 노동자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긴축에 맞서 그리스에서는 지난 26일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였다. 그리스에서는 경제 위기가 시작된 이후 이미 20여 차례 총파업이 있었다. 우파는 지난 6월 근소한 차이로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총파업을 막을 수 없었다.

포르투갈에서는 9월에만 1백만 명이 참가한 두 차례의 시위를 포함해서 크고 작은 시위가 계속 열렸다. 이는 집권 세력을 분열시켰고 결국 정부는 긴축 조치를 부분적으로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스페인에서는 9월 25일 4만여 명이 의회를 포위했다. 7월 광원들의 영웅적인 파업 행진 이후 스페인에서는 수만 명이 참가하는 긴축 반대 시위와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마드리드 도심에서는 경찰과 시위대 간에 시가전에 가까운 충돌이 벌어졌다. 긴축이 낳은 긴장은 바스크와 카탈루냐에서 분리 운동으로도 표현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긴축에 반대하는 정서에 힘입어 사회당 올랑드가 대통령에 당선했지만 그는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치려고 한다. 재정지출을 법으로 제한하는 유럽재정 협약의 의회 승인을 요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지난 30일 파리에서도 10만 명이 긴축에 반대해서 행진을 벌였다.

이탈리아에서도 양대 노층의 호소로 공공부문 노동자 3만 명이 정부 긴축에 반대하는 파업 행진을 벌였다. 앞장서서 다른 나라들에게 긴축을 강요한 독일에서도 40개 도시에서 수만 명이 부자 증세를 요구하며 행진했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6월 30일에 75만 명, 11월 30일에는 무려 2백50만 명이 긴축에 반대해서 역사적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영국 노동자들은 다가오는 10월 20일에도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이 체제와 지배계급의 거짓말이 파산하

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배자들은 일시적으로 긴축을 받아들이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그들은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면 스페인과 포르투갈, 프랑스로 위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떠들면서 긴축을 강요했다. 그러나 그리스가 여전히 유로존에 남아 있는데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위기에 빠졌다.

동시에 긴축이라는 고통은 그리스 국경 밖으로 계속 확대됐다. 지난 4월 그리스에서는 한 노인이 “쓰레기 속에서 먹을 것을 뒤지기 시작하기 전에 품위 있게” 죽겠다며 공개적으로 자살해서 충격을 준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스페인에서는 실업자들이 식량을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을 막으려고 정부가 자물쇠를 설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경제가 회복되리라는 기대가 꺾인 노동자와 청년층이 투쟁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유럽중앙은행이 그리스와 스페인의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들의 불신을 되돌리지도 못했고 위기를 해결하지도 못할 것이다.

이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경제 위기가 정치 위기로 전환하는 것은 11년 전 아르헨티나를 떠올리게 한다.

아르헨티나

2001년 아르헨티나 정부는 IMF한테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혹독한 긴축을 추진했다. 이런 고통전가를 순순히 받아들일길 거부한 노동자 파업과 시위의 결과로 한 달 동안 대통령이 세 번이나 바뀌었고 IMF한테 빌린 돈은 사실상 탕감됐다. 주류 언론들은 “혁명 직전”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노조 지도부는 ‘금융자본’을 비난하며 ‘산업자본’과 노동계급 사이에 협력을 강조하는 페론주의를 채택했고 결국 구체제는 유지됐다. 이후 아르헨티나 경제는 연평균 8퍼센트나 성장했지만 노동자 임금은 2007년까지도 2001년의 70퍼센트 수준을 유지했다.

따라서 좌파는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대안적인 체제로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요구, 즉 이행기적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대안 논쟁이 가장 첨예한 곳은 그리스

다. 그리스의 혁명적 반자본주의 연합체인 안타르시아는 유로존을 탈퇴해 은행 빚 갚기를 거부하고 노동자와 서민의 복지와 생계를 위해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그리스에서 이런 요구가 실현된다면 다른 유럽 은행과 나라가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지배계급은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면 물가가 치솟아 경제는 끝장나고 각국은 그리스를 ‘왕따’시킬 것이라고 떠든다. 영국 총리는 유로존 붕괴 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로부터 ‘경제적 난민’의 이주를 막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저들이 바라는 미래일 뿐이다. 그리스 운동이 고립되기는커녕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할 수 있다.

유럽 전제로 확산 중인 노동자 투쟁은 그런 얘기가 결코 낭만적 공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노동자를 살린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가장 현실적이기도 하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위기는 야만을 불러올 수 있다. 그리스 황금새벽당과 프랑스 국민전선과 같은 인종차별적 파시스트가 이슬람 혐오증을 부추기며 성장하는 것은 이것이 결코 기우가 아님을 보여 준다.

파시스트들은 개혁주의 정부의 한계와 그것이 낳는 환멸을 이용해서 성장하려 든다.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올랑드는 긴축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비위생적이라며 집시촌을 강제로 해산했고,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를 모욕한 잡지에 대한 항의 시위를 금지했다.

그 결과 올랑드의 지지율은 취임 1백일 만에 44퍼센트로 곤두박질쳤다. 르펜의 국민전선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노골적으로 인종차별을 부추기며 어부지리를 노리고 있다.

유럽 사회주의자들은 독자적 주장과 대안을 내놓으며 개혁주의의 대중 속에서 투쟁을 건설하는 데 핵심적 구실을 하고 있다.

대선 이후 본격화할 고통전가에 맞선 투쟁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에게 유럽의 노동자들과 좌파는 큰 영감을 주고 있다.

김중환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부채 위기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유럽 지배계급이 직면한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시기에 긴축에 반대하는 저항이 확대되고 있다고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주장한다.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까지 긴축 반대 시위 열풍이 유럽을 휩쓸고 있다.

이는 정치적 분위기가 매우 급격하게 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지난 몇 주 동안 [경제 상황에 대한] 논평의 일반적인 논조는 이제야 유로존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라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금융시장도 상승 기조로 돌아섰다.

유럽중앙은행 총재 마리오 드라기가 8월 말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를 매입하겠다고 한 발표가 이 낙관의 기원이었다.

이 발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정부가 대출에 가혹하게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중요했다. 드라기의 발표 이후,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와 독일 국채 이자율의 차이(스프레드)가 상당히 줄었다.

물론, 세부 단서들이 많았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정부는 트로이카(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IMF)가 제시하는 더 많은 신자유주의적 “개혁” 조치들에 동의해야만 한다.

드라기의 계획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엔스바이트만 독일 중앙은행 총재가 반대하고 있다. 바이트만은 부채가 많은 국가들에 돈을 퍼 주는 것은 짐바브웨 식의 하이퍼인플레이션[1년에 수백 퍼센트 이상 물가상승이 일어나는 경우]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페인

그러나 아직은 드라기의 계획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진정 중요한 상황은 유로존에서 넷째로 큰 경제인 스페인이 그리스와 비슷한 상황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에서는 긴축이 경제 침체와 정치 혼란, 사회 저항을 낳았다.

인기가 바닥인 스페인의 우익 총리 마리아노 라호이는 유럽중앙은행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블랙록 펀드 매니저 이완 카메론 와트가 말했다가 “그는 [트로이카] 기관원들을 설득할 수 없다.” 트로이카 감독관들은 최근 그리스에 더 많은 삭감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라호이가 기동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적이다. 스페인 은행들은 2000년대 중반 부동산 거품 시기에 생긴 악성 채무로 인해 허리가 휘고 있다. 가장 최근 추정치로는 4백80억 파운드(86조 3천억 원)에 가까운 추가 자본이 필요한데, 일부 분석가들은 이것마저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수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스페인 경제는 수축하고 있다. 그래서 라호이는 유럽연합의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긴축은 스페인 국가 내 분열을 확대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당은 프랑코 독재의 정치적 후손인데, 이들은 바스크와 카탈루냐 민족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억눌러 온 자들이다.

카탈루냐 지방정부는 분리 독립 국민투표의 사전 투표 성격을 띠는 총선을 막 공표했다. 카탈루냐 민족주의자들은 지방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자 하는 라호이와 이미 대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라호이에게 부과된 삭감에도 분노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유럽의 주변부 정부들을 무너뜨렸던 유로존 위기가 이제 국민국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유럽연합 내 남북간의 균열이 이제는 회원국들 내부에서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냉전 말 구소련과 그 완충국들이 쪼개질 때, 유럽연합의 지도자들 모두는 자기결정권이라는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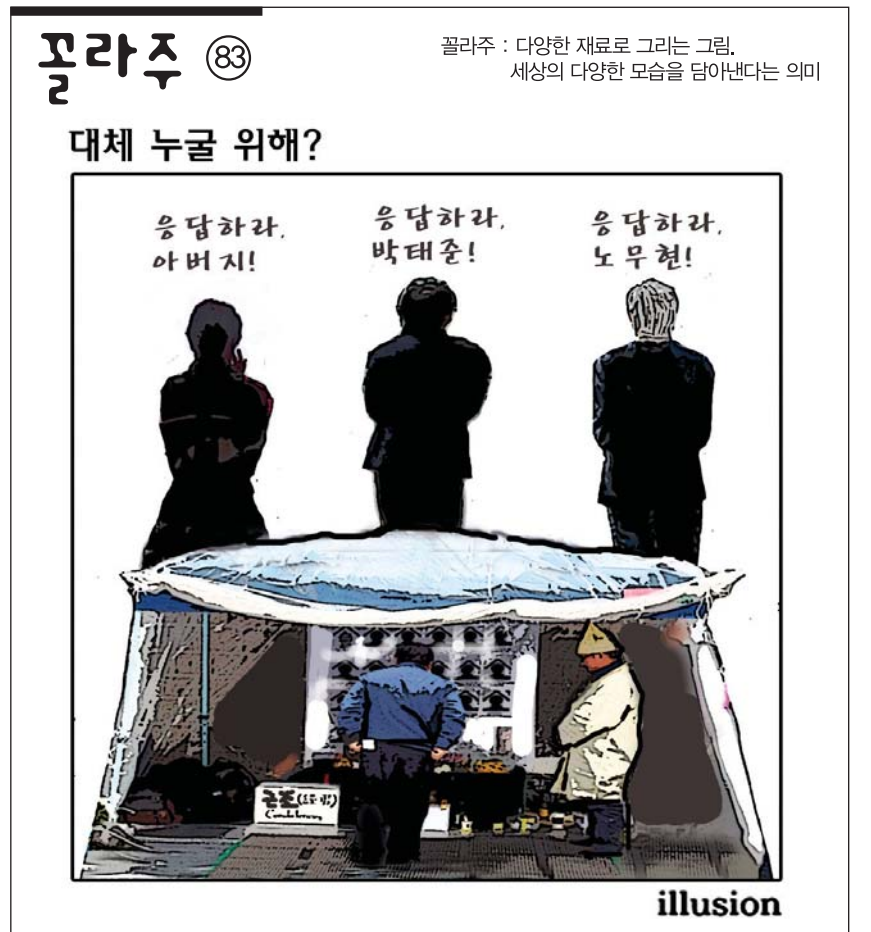
“그러나 그들은 분리주의가 서유럽의 안정적 구조에 침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그리스발 질병이 퍼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사회적 균열은 유럽 전역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스에는 특히 강력한 노동자 운동과 급진 좌파가 존재한다. 그래서 지난주 총파업과 같은 규모의 사회적 저항이 있었다.

스페인에도 강력한 사회운동이 있다. 하지만 정치 좌파가 미약하다는 것과 프랑코의 유산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상황은 달리 발전하고 있다.

그리스 황금새벽당의 급성장에서부터 스페인 군대가 분리주의자들에게 가하는 위협까지 어디에서나 반동의 흥측한 징후가 보인다. 다행히 저항 또한 어디에서나 성장하고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3호 / 번역 김인수



박근혜의 뿌리인 ‘10월 유신’ 40년

‘1퍼센트의 꿈’을 위한 친위 쿠데타

올해 10월 17일은 박정희의 친위 쿠데타인 “10월 유신” 40년 되는 날이다. 이번 호에서는 박정희의 유신체제의 탄생과 과정, 몰락을 돌아보며 박근혜 정치의 본질을 살펴본다.

한규한 경성대학교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역사전공

최근 박근혜의 ‘사과’는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 듯하다. 조갑제 같은 구제불능의 우익은 “아버지와 조국에 침을 뱉은 반역사적 사과”라고 흥분한 반면, 인혁당 유가족들은 “제발 마음에도 없는 거짓 말을 하지 말고 차라리 가만 있어 달라”고 일침을 놓았다.

사실, 박근혜의 ‘사과’는 뻔뻔한 ‘변명’에 가깝다.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아버지의 진심”을 알아달라는 것이다.

박정희는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5·16 쿠데타를 일으킨 지 11년 만인 1972년에, 똑같은 이유로 다시 한 번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른바 ‘10월 유신’이다.

1970년대 들어 박정희 체제는 총체적 위기를 맞게 된다. 경제는 위기의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경제성장률은 1969년 13.8퍼센트였지만 이듬해에는 7.6퍼센트로 곤두박질쳤다.

전태일이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자명한 사실을 알리며 분신을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가혹한 착취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도 곱씹거리기 시작했다. ‘노사분규’는 1970년 1백65건에서 1971년 1천6백56건으로 폭증했다. 베트남 파견 노동자들은 한진그룹 분사 빌딩을 점거하고 불을 질러 버렸다.

참혹한 생활을 못 이긴 도시 빈민들의 울분은 광주대단지 폭동사건으로 터져 나왔다.

국가 기구의 일부도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 법관들은 이른바 사법파동을 일으켜 박정희에 공공연히 항명했다.

요컨대 박정희식 고속 축적 체제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커져 가고 있었다. 대중은 변화를 원했고 이는 야당에 대한 지지로 표현되곤 했다.

특히, 1971년 대선에서 이런 변화의 바람이 절정에 올랐다.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형욱(이후 그는 행방불명됐는데, 프랑스에서 박정희의 요원에게 암살된 뒤 양계장 분쇄기에 넣어져 사료로 쓰였다는 증언이 있다)은 당시 대선을 이렇게 묘사한다.

“김대중 유세에 모인 청중은 그 시간따라 예비군 동원이니 뭐네 하는 정부의 방해공작에도 무릅쓰고 자발적으로 운집한 청중들이었다. 나는 한마디로 말해서 김대중 유세에 운집한 인파들이 내뿜는 열기와 분위기에 숨이 막힐 만큼 질려 버렸다. 민중은 분명히 김대중의 편이었다.”

유신 쿠데타는 북한 위협과 체제 경쟁을 빌미로

불만에 찬 노동자·민중에게 채찍을 가해,

위기에 빠진 경제를 다잡고

더욱 급속한 자본 축적을

도모하려는 반동 시도였다.

노동자·민중에게 이 체제는

영원히 제대할 수 없는

군 생활과 마찬가지로였다.

한국에서 자유주의 야당은 기층 민중 운동과 유기적 관계를 맺은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도 민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던 것은 박정희식 경제 성장에 대한 야당의 포퓰리즘(민중주의)적 비판과 더불어 무엇보다 박정희 독재의 억압적이고 야만적인 성격 덕분이었다.

어쨌든 박정희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겨우 승리할 수 있었다. 박정희는 6백억~7백억 원을 선거자금으로 썼는데, 이는 당시 정부 예산의 10퍼센트를 넘는 천문학적 규모였다. 게다가 이듬해 총선에서 사실상 여당이 패배한 사실은 박정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마지막 도미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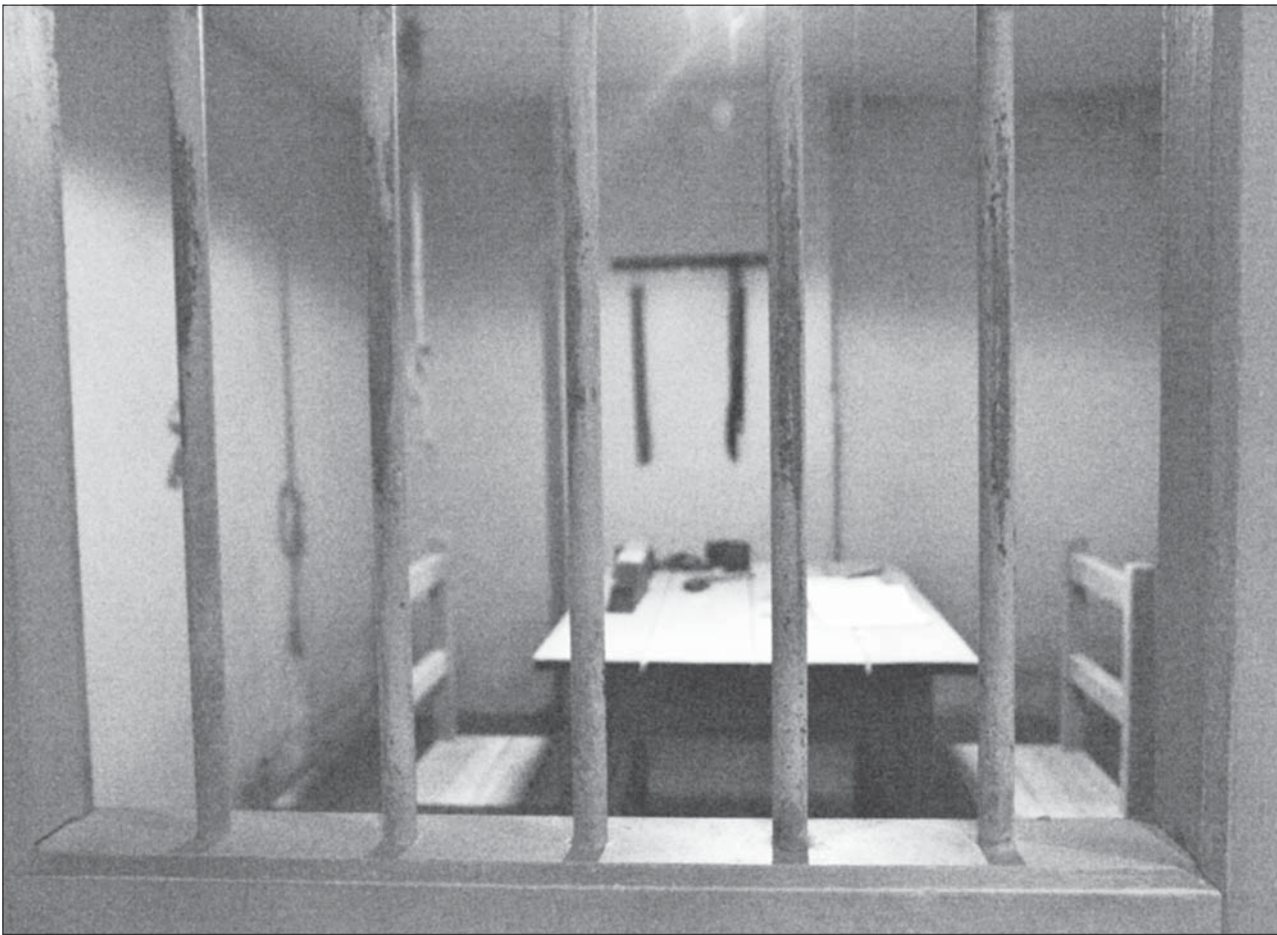
무엇보다 박정희를 두렵게 만든 것은 국제 상황의 변화였다.

미국의 베트남 침략은 파국에 이르렀다. 1969년 닉슨 독트린은 사실상 항복 선언인 셈이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군을 감축하는 대신 힘의 공백을 대중국 유화정책으로 만회하려 했다.

박정희 같은 반공 독재자들에게 이는 악재였다. 언젠가 자신들도 남베트남의 독재자 티우처럼 버림받는 것은 아닐까?

브루스 커밍스는 당시 분위기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미국의 대외정책 상의 극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남한은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아시아의 마지막 도미노처럼 보였다.”

그런 점에서 박정희가 유신 쿠데타의 명분으로 ‘국가 안보 위협’을 든 것은 일말의 진실이 있다. 즉 1인 독재에 기반한 고속 축적 체제가 ‘위협’에 직면해 있었고,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억누르고 착취를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를 돌파



지금은 역사관이 된 옛 서대문형무소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더욱 급속하게 자본을 축적하려고 박정희는 온 사회를 감옥으로 만들었다.

하려 한 것이다.

좀더 넓은 맥락에서 보면 유신 쿠데타는 베트남 민중의 반제국주의 투쟁 승리와 이에 고무된 저항 분위기에 맞서 국제적 차원(특히 아시아)에서 벌어진 반동적 대응, 즉 국제적 계급투쟁의 일부였다. 예를 들어 아시아에서만도 1970년 캄보디아의 우익 쿠데타, 1971년 타이 군부의 의회 해산과 계엄선포, 1972년 필리핀 마르코스의 군부 쿠데타 등이 연이어 벌어졌다.

어쨌든 박정희는 이런 ‘난국’을 돌파하려고 초권위주의적 억압을 강화했다. 1971년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사실상 모든 산업에서 쟁의 행위를 금지했다. 전태일의 무덤에 침을 뱉는 짓이었다.

1972년 들어 남북대화 국면이 열렸을 때도 박정희는 이를 체제 단속에 이용했다. 예를 들어 박정희는 7·4 공동성명 직후 ‘유럽 간첩단 사건’ 등 각종 간첩 사건으로 수감된 정치범 30여 명을 씩씩이 하듯이 처형해 버렸다. 그리고는 급기야 그해 10월 유신 쿠데타를 일으키고 만다. 이는 그때까지 남아 있던 민주주의의 껍데기마저 부숴 버리는 것이었다.

직전 대선에서 박정희는 대통령 후보 출마가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더는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는데, 그 공약은 이행한 셈이다. 유신체제에서는 국민들의 투표도, 번

거롭게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필요도 없어졌으니 말이다. 박정희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자기 손으로 임명할 권한까지 얻었다.

긴급조치, 처형… 박정희식 민주주의

그런데도 불안했는지 그는 이른바 ‘긴급조치’를 남발해 저항을 억눌렀다. 심지어 긴급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긴급조치 위반이라며 탄압할 수 있었다. 박정희는 유신체제를 일컬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했지만, 그 민주주의는 처형과 고문, 납치 등으로 유지됐다. 인혁당 사건 처형, 장준하 암살(의혹), 김대중 납치 살해 기도가 대표적이다.

또한 유신 쿠데타와 더불어 이제는 중화학공업화와 수출 1백억 달러를 달성해야겠다고 하며, 또다시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했다. 급속한 중화학공업화 추진을 위해 저임금 기조는 바꾸지 않았고, 노동시간과 산업재해는 급격히 늘어 갔다. 노동 규율과 통제는 더욱 엄혹해졌다. 유신체제는 한국 자본주의가 중화학공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 일종의 채찍이었다.

물론 이런 야만적 체제에서도 이득을 본 자들이 있다. 재벌은 유신체제 하에서 추진된 중화학공업화를 통해 진정한 재벌로 성장했다. 브루스 커밍스의 말마따나 “현재 회사 이름으로나 회사 로고로 전 세계에 알려진 한국의 대기업들을 창출해

낸 것은 이런 ‘중공업 추진 정책’이었다.”

물론 이 과정은 정부의 막대한 특혜(해외 차관 지원, 국민 혈세 지원 등) 덕분에 가능했다. 이에 따라 1970년에서 1983년 기간 동안 현대그룹은 자산이 1천7백16만 달러에서 71억 5천8백78만 달러로, 대우는 8백39만 달러에서 53억 7천62만 달러로, 삼성은 1억 7천5백 84만 달러에서 54억 2천84만 달러로 폭증했다.

결론적으로 유신 쿠데타는 북한 위협과 체제 경쟁을 빌미로 불만에 찬 노동자·민중에게 채찍을 가해, 위기에 빠진 경제를 다잡고 더욱 급속한 자본 축적을 도모하려는 반동 시도였다. 노동자·민중에게 이 체제는 영원히 제대할 수 없는 군 생활과 마찬가지로였다.

박근혜는 사과랍시고 “과거가 아닌 미래로 국민대통합의 정치로 함께 나가[자]”고 했지만, 이것이 과거 유신 시절 박정희가 외친 “국민 총화 단결”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한국 자본주의가 또다시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박정희의 정치적 계승자가 다시 등장해 5·16과 유신을 정당화하고 일부 지배자들이 이에 동조하고 나선 것은 불가피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기득권에 대한 불만, 지배계급에 대한 적대감을 버리고 자본 축적에 매진하라는 점에서 두 부녀의 메시지는 근본에서 다르지 않다.

‘박근혜 대세론’이 ‘필패론’으로 바뀐 이유

박근혜 대세론이 ‘박근혜 필패론’으로 바뀌면서 집권당이 자중지란에 빠져드는 듯하다.

인혁당 사건 관련 발언 이후 반우파층이 결집하며 지지율 1위를 추월당하고 일대일로는 문재인에게도 뒤지는 상황이 한 달 가까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위기감 때문에 추석을 앞두고 5·16과 유신이 “헌법 가치 훼손”이라고까지 ‘양보’했지만, 별무효하다. 박근혜는 정작 인혁당 문제 사과를 건의한 당대변인 홍일표를 잘라냈고, ‘사과’ 당일 부산에 내려가 말춤을 추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

그래서 10월 4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선 당 전면 쇄신과 친박 측근 총사퇴 등이 거세게 제기됐다. “[박근혜가] 머리 풀고 몸빼라도 입고 나올 정도로 변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친박들의 반발 때문에 이런 쇄신도 어려울 뿐 아니라, 대선을 코앞에 두고 선부른 ‘쇄신’ 시도가 오히려 붕괴를 낳을 거라는 위기감도 제기되고 있다.

위기 돌파를 위한 외연 확대 차원에서 끈 뿔어진 동고동계 한광옥을 영입했으나, 앞서 영입한 안대희가 “무분별한 비리인사 영입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같은 날 또 다른 영입인사 김종인은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당은 아무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할 수 없다”며 결별을 암시했다.

엮인 데 뿔친 격으로 친박 측근들의 골프 회동 추문, 선거 돈 살포 추문에 박근혜 사촌들의 부정축재 의혹까지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총체적 위기 시점에서 박근혜가 직접 전의까지 한 무상보유 정책에 이명박 정부가 어깃장을 놓고, 내곡동 특검 임명을 거부했던 것도 의미심장하다.

새누리당은 내곡동 특검에 대해 청와대 편을 들면서도 이명박이 특검을 거부

하면 생길 파장에 곤혹스러워했다.

이런 혼란과 동요는 이명박의 레임덕과 박근혜의 딜레마가 겹쳐진 결과다.

박근혜의 우파적 본질 때문에 중도적 외연 확대가 필요하지만, 성공 가능성이 너무나 작다. 이런 상황에서 우파 결집에 조금이라도 균열이 생기면 안 되므로 이명박을 내칠 수도 없다.

이런 모순과 한계 때문에 박근혜는 그동안 우파 결집과 중도적 외연 확대 사이에서 동요해 왔고, 이명박과도 확실한 차별화를 못 하고 줄타기를 해 왔다.

그런데 수도권과 청년세대 사이에서 반우파 정서가 커지는 것을 봐두면 대세

론은 무너지게 된다.

투표 시간 연장 제안을 결사 반대하듯이, 젊은 층이 투표표소로 물려오면 멘붕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를 배반한 것처럼 아버지를 부정”했지만, 그럼에도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박근혜도 박정희의 사도이길 포기한 것은 아니다. 결국 박근혜의 모순과 위기는 박근혜가 우파적 정체성과 기반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진보진영은 ‘박근혜 필패론’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공격과 행동에 더 박차를 가하며 독자적 대안을 건설해야 한다.

김문성

문재인의 ‘사회적 대타협’론을 경계해야

문재인이 최근 국정 최우선 목표로 제시한 것은 “일자리 혁명”이다. 그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기업도 “꼭 필요할 경우에만 정리해고 가 되게끔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기업주들의 이익을 거스르지 못하는 민주당의 본질적 약점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는 “기업-노동자 측이 함께 협력”해야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고 말한다. “일자리를 확충하려면 기업에 부담을 준다. 노동계도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순 없다.”

문재인이 강조하는 ‘사회적 대타협’은 이런 논리에서 비롯했다. 그는 기업주들만이 아니라, 노동자들도 임금 피크제 도입, 임금 인상 자제 등 일정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창출’ 약속은 설득력이 없다. 문재인의 논리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이 임금을 양보하면 일자리도 늘고 비정규직도 줄어야 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실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1997년 IMF와 2008년 경제 위기 때도 정규직의 노동조건 후퇴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지 못했다. 오히려 대량해고가 줄을 잇고 청년실업이 늘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맨 먼저 직장에서 쫓겨났다.

이것은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하에서도 만연했던 일이다. 당시 정부는 “정규직 이기주의”를 집중적으로 두들겼고, 결국 전체 노동자들의 삶을 하향평준화시키는 결과만 낳았다.

고통분담

최근 친민주당 지식인 김기원은 이런 고통분담론의 위험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는 쌍용차 회계조작 사실까지 부정하며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옹호한다. “상하이차가 … 적자를 벗어날 자원이 없어서 한국을 떠났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문재인의 대타협론은 벌써부터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잘못 풀었다”(이병훈 교수)는 비판을 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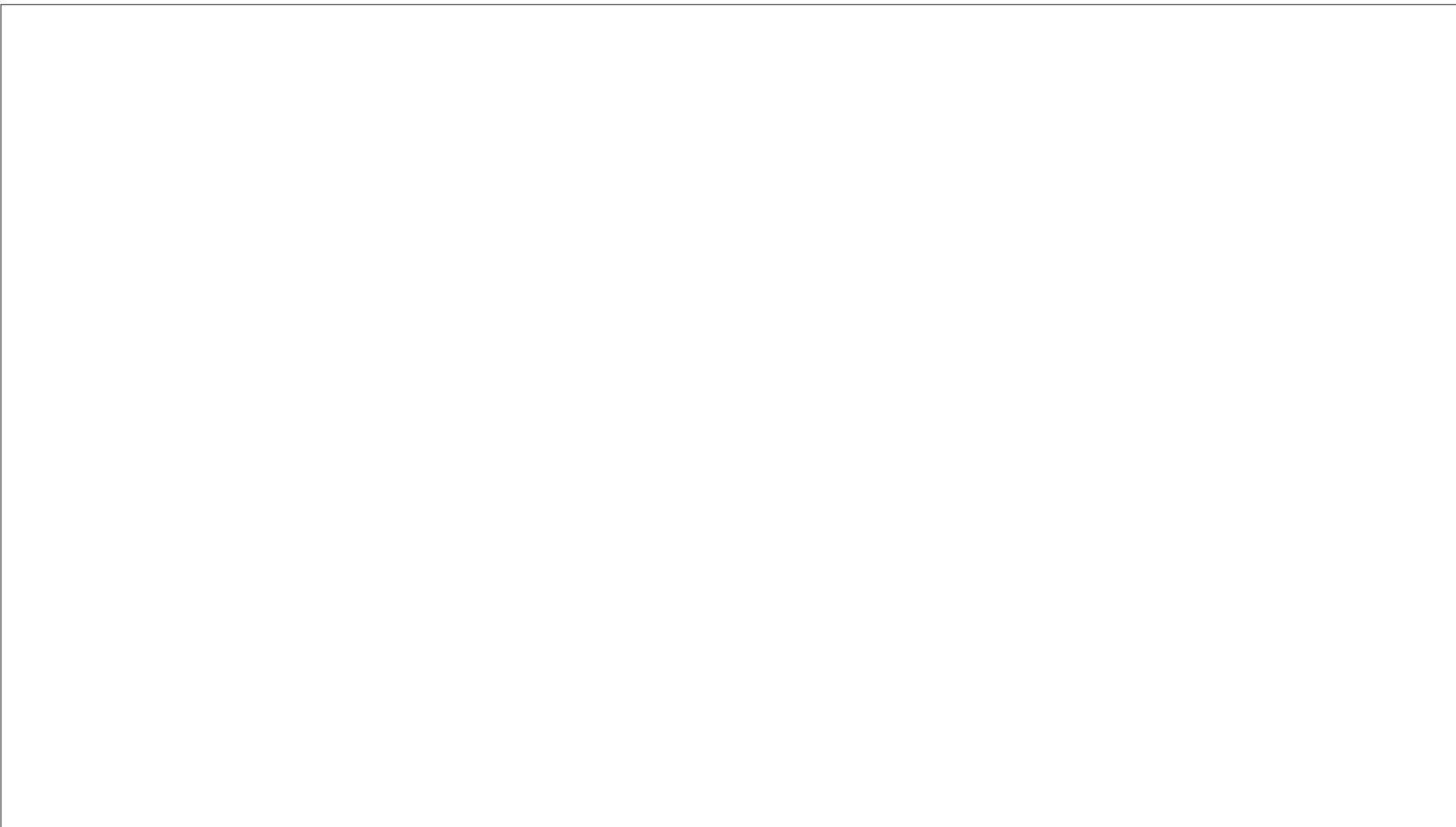
그는 쌍용차 노동자·가족을 만나 눈물을 흘리고 ‘사회적 관심’도 촉구했지만, 끝내 해고자 복직은 약속하지 않았다. “내가 대안을 갖고 있다고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문재인 대변인 진선미)라며 기껏 국정조사 실시를 약속했지만, 민주당은 그마저도 국회 환노위에서 관철시키지 못했다.

문재인이 근래 ‘보수 전락풍’으로 알려진 새누리당 출신의 윤여준까지 영입한 것도 ‘사회적 타협과 화합’ 논리의 귀결일 것이다. 윤여준은 “문재인이 곧 박정희 묘소를 참배할 것”이라며 본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렇게 문재인이 “진보의 편협성”을 벗겼다며 “합리적 보수” 껌안기에 나서는 동안, 민주노총 전직 지도부 일부는 ‘노동정치포럼’을 결성해 “지지 세력을 만들어 주겠다”며 민주당·안철수와 정책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유감스런 일이다. 이들은 박근혜를 막겠다는 논리를 펴지만, 대선에서 비관적 투표를 하는 것과 무비판적으로 민주당에 줄을 서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차기 정권이 누가 되더라도 예상되는 고통전가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대타협과 양보’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진보 진영의 독립적 투쟁 건설이 중요하다.

박설



신민당사를 접거한 YH 노동자들 이 투쟁은 부마항쟁으로 이어지며 유신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됐다.

최순영 전 의원 인터뷰 — 유신 선포 40년, YH 투쟁 33주년

“여성 노동자의 힘으로 유신정권을 무너뜨렸죠”

1975년에 생긴 YH무역 노조는 사측의 폐업 조치에 대한 정부 대책을 요구하며 1979년 8월 9일 신민당사를 접거했고, 박정희는 여성 노동자 1백86명을 끌어내려고 1천 명이 넘는 경찰을 투입했다. 폭력 진압 과정에서 노동자 1백여 명이 다치고 노조 대의원 김경숙 열사가 사망했다. 이 투쟁은 결국 부마항쟁으로 이어지며 유신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됐다. 당시 YH노조 최순영 지부장(사진)은 2004년에 당선했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지금도 부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일선에서 뛰고 있다. 인터뷰 전문은 <레프트21>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박정희 정권 아래서 노동자들의 처지가 궁금합니다.

그때는 국가가 농촌을 살기 힘들게 만들어서 사실상 도시로 쫓아냈어요. 입 하나 더는 식으로 올라와서 16~17시간까지 일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잔 거죠. 일하는 데도 일어서면 머리가 천장이 닿아. 화장실도 못 가고 뺑끼통(페인트통) 그런 거에 일 보고, 미싱하다가 손가락에 찔리는 일도 많았어요.

박정희는 선성장 후분배 한다면서 수출하는 업체한테는 엄청난 특혜를 줬어요. YH도 1965년에 자본금 1백만 원으로 직원 열 명 데리고 시작했는데, 4년 만에 노동자 4천 명에 2천 평짜리 공장을 지었어요. 누구 돈으로 지었을까요? 국가가 그냥 돈을 준 셈이었죠.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기로 돈을 갈기로 굴었다 그랬으니까. 그 돈이 누가 번 거냐면 노동자들 피와 땀이지요.

노동조합을 만든 과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때는 노동자라는 소리만 해도 빨갱이었어요. 그건 북한 용어다 해서요. 노동조합 없을 때는 말도 못하게 일 시켰지.

그때는 모두 비정규직이나 다름없었어요. 나가려면 안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노조를 만들 때는 기숙사 이불 속에서 불 꺼 놓고 가입서 받았는데, 그걸 브래지어에 숨겨서 회사 밖으로 빼 왔어요. 2천 명 중에 9백 명을 받았어요. 그때 회사에서 회유책을 엄청 썼어요. 하청공장 차려 주겠다. 동생 학비도 대 주겠다. 시집 갈 밑천도 주겠다.

그랬는데 노동조합이 되면서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그때는 그것만 해도 정말 좋은 거예요. 일요일마다 놀고 8시간만 일하고, 노동조합 없던 데서 있던 애들이 YH에 오면, 아 노동자의 천국이구나 그랬대.

그런데 1979년 3월에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이 난 거죠. 그때 우리도 중앙정보부에 끌려갔어요.

잡혀간 날 조합원들이 눈치를 딱 채고, 조합원 사무실에 다 모인 거야. 그때 정보과 형사가 동향 파악하러 딱 온 거지. 형사가 너네 지부장 간첩이라서 잡혀 갔다고, 이러면 겁 먹을 줄 알았겠죠. 그런데 조합원들이 지부장은 우리를 위해 일을 했다. 그제 간첩이면 우리도 간첩 아니냐며 우리도 잡아가라 그랬대. 그래서 정보과 형사가 도망가 버린 거야.

그 당시에는 긴급조치와 국가보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파업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밥을 안 먹은 거예요. 우리 지부장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밥을 먹냐. 그 다음 날은 침묵시위를, 마지막 날은 까만 리본을 다 달았어요. 언니가 죽었는데도 모른다 이러면서.

신민당사 점거 과정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왕 깨질 거 왕창 깨지자. 소리를 크게 내자. 전국 방방곡곡에 알리자, 그리고 다른 노동자들을 보호하자, 그래야 재네들도 겁을 먹을 거 아니냐.

그래서 총회를 하면서 신민당사로 결정했어요. 몰래 가야 하니까, 1백86명이 가고 남은 사람이 적으니까 많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려고, 녹음해 놔던 노래 녹음기를 같이 틀어 놔어요. 그리고 새벽 6시에 플라스틱 작은 대야를 목욕가는 것처럼 들고 나갔어요.

공화당 이놈들한테 가 보면 어떻게 생각하다가, 신민당사로 갔어요. 신민당사가 마포대교 옆이었는데, 그때 [미국 대통령] 카터가 와서 그 길을 지나갈 거란 말이 있었죠.

그땐 노동자 문제가 검열에 걸려 보도가 안 났어요. 그런데 기독교방송에서 처음 보도해 주고, 신민당사에 가면서 <동아일보> 석간에도 났죠.

우리가 들어가면서, 끌어내면 마포다리에 다 빠져 죽는다고 하자 했죠. 사실 그때는 해고되면 갈 데가 없었어요. 사양산업이고, 일자리도 없고, 술집 갈

은 데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플래카드가 “배고파서 못살겠다”, “먹을 것을 달라” 이런 거였죠.

신민당사에서 종결대회를 하고, 기동대가 열 대도 넘게 들어오는 거 보고, 조합원들이 4층 난간에 다 매달렸어요. 올라오면 죽겠다고. 김영삼이 올라와서 안심하고 자라 이랬는데, 그날 들어온 거예요. 관광버스에 나뉘 태워져 경찰서로 갔어요.

조사관 하나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시작해 보자” 이라고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때 복직은 못했지만, 그걸로 해서 노동자의 억울함을 세상에 많이 알렸다고 생각해요. 학생들도 현장으로 들어가고, 관심을 더 갖기 시작했죠.

이제 부마항쟁도 일어나면서 바로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됐죠.

그때 우리가 [민주노조 활동가들] 토론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살아 생전에 유신이 무너지는 걸 볼까?’ 이랬어요. “파업만 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 꿈이었어요.

나중에 우리 힘으로, 여성 노동자의 힘으로 유신정권을 무너뜨렸구나, 우리 싸움은 성공이라고 했어요.

2008년에 김경숙 열사 사망 원인이 타살로 밝혀졌습니다.

당시에 조합원 50명을 모아서 김경숙을 본 사람을 알아내려고 노력했는데 본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살인지 타살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자본가와 국가가 우리를, 김경숙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
크리스찬아카데미는 1963년에 만들어진 기독교 사회 단체로 1970년대에는 ‘중간집단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 농민, 여성, 학생, 교회 등에서 민주화 활동가들을 길러 냈다. 이를 눈엍가시로 여긴 박정희 정권은 1979년 3월 이 단체 활동가들과 피교육생들을 옹공 혐의로 대거 구속·연행했다. 살인적인 고문으로 혐의를 조작했으나 결국 혐의 조작이 밝혀졌다.

김경숙 열사
경찰은 당시 김경숙 열사가 “스스로 동맥을 끊고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했지만, 2008년 3월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조사 결과 경찰이 자행한 타살로 밝혀졌다.



이영희 기자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런데 30년 지나서 알고 보니 그들이 죽인 거였죠. 떨어진 곳도 세 번이나 바뀌고, 그들이 떨어진다고 한 곳엔 창문도 없고, 동맥 절단도 안 했고요.

시골에 경숙이 남동생, 엄마가 있는데, 엄마를 수원 여관에 있게 하고는 [시신을] 바로 화장시킨 거예요. 장례식도 못 하고, 우리는 감옥에 있으니까 알지도 못하고요.

1989년 우리 투쟁 10주년에 모란공원에 가묘를 만들었어요.

이제는 모란공원에 가면 역사를 다 볼 수 있어요. 모든 게 그냥 이뤄진 게 아니라 투쟁에 의해 얻어진 결과예요. 이름도 빛도 없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박근혜가 최근에 박정희 시대에 대해 사과 비슷한 걸 했는데요.

박정희 시대란 게 인혁당이나 장준하 선생의 사건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것이냐고요.

우리도 당시에는 인혁당 사건이 정말 간첩 사건인 줄 알았어요. 노동운동하면서 알았지만 쉬쉬하니까 자세히 몰랐고요.

박근혜가 후보를 사퇴하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반성하고 아버지가 만든 경제 구조와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겠다고 한다면 진정한 반성이고 제대로 된 평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인혁당을 민혁당이라고 엉뚱하게 말하는 식이에요.

[박근혜가] 자기 아픔을 그 사람들 아픔과 비교하면 안 돼요.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는 절대 안 돼요.

인터뷰·정리 김문성

‘안철수 현상’과 안철수 사이의 커지는 모순

안철수가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면서, 우파는 역겹게도 ‘그도 성인군자가 아니라 우리와 비슷하게 반칙·특권에 얼룩진 그저 그런 자다’라는 것을 입증하려 애쓴다.

그러나 진짜 ‘검증’은 지금부터인 듯하다. 안철수는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한 것을 통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어느 정도 밝혀지면 파장이 꽤 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기성 정치 세력에 대한 반감을 넘어서, 사람들의 분노와 변화 열망을 제대로 대변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안철수 지지율은 흔들릴 수 있다. 지난 몇 차례 대선에서 이른바 ‘제3후보’의 실패가 이것을 보여 준 바 있다.

그런데 출마 선언 이후 안철수의 행보를 보면, 그가 ‘안철수 현상’에 담긴 대중의 열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철수의 생각》에서 ‘복지, 정의, 평화’를 제시했던 그는, 출마 선언에서는 ‘성장과 결합된 복지’, ‘안보와 균형 맞춘 평화’를 제시했다. “현 집권 세력이 확장하는 것에 반대”한다던 주장은 “통합의 정치”(사실상 타협의 정치)로 바뀌었다. 민주당과 새누리당 사이층(이른바 ‘중도층’)을 겨냥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안철수의 ‘우클릭’을 상징하는 것은 이현재 영입이다. 이어서 영입한 ‘재벌개혁론자’ 장하성도 사실 이현재와 통하는 면이 있다.

이들이 자유로운 시장 경제가 효율적이라고 믿는 철저한 시장주의자들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의 지적처럼 김대중 정부 시절 이현재의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은 실제로는 “경제 자유화”와 “주주 자본주의화”일 뿐이었다. ‘소액주주 운동’을 하고 ‘장하성 펀드’를 만든 장하성의 문제의식 역시 기업이 ‘법적 주인’인 주주를 위해 이윤 극대화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장하성 펀드는 ‘기업 소유 구조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주주가치 극대화를 요구하는 사모펀드(투기자본)와 다를 바 없었고 외국 투



대선 출마 선언 다음날 박정희·이승만 묘소를 참배한 안철수 ‘안철수 현상’의 핵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안철수

기자본과 협력하기도 했다.

이현재의 ‘재벌·금융 개혁’은 대규모 정리해고를 낳았고, ‘장하성 펀드’는 주주의 투자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한 점에서 반노동자적이었다.

자유경쟁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안철수 또한 창업이 활성화되고 벤처·중소기업이 활성화되면 자연히 일자리도 늘고 경제가 성장할 거라 믿는다. 안철수의 ‘혁신경제’ 구상은 이런 생각에서 나왔다.

시장 자유주의

사실 이런 안철수의 구상은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생기고 그러면 노동자도 잘 먹고 잘살 수 있다는 전형적인 기업가적 관점이다.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청년 창업을 우선하는 차이가 있지만, 사실상 또 다른 버전의 ‘낙수 효과’인 셈이다.

그런데 이렇게 ‘자본주의의 역동적 생

명력을 굳게 믿는 시장 자유주의의 관점’은 복지 확대 요구와 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다.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는 ‘1원 1표’라는 시장주의 원칙과 근본에서 어긋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철수는 무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는 거리를 뒀 왔다.

안철수가 “근본주의적 접근은 안 된다”며 민주당 수준의 개혁과도 거리를 두는 것에서 그의 한계는 더욱 두드러진다. 민주당이 ‘근본주의적’이라니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다.

이렇게 보면 안철수의 ‘생각’에 이른바 ‘노동’ 의제가 보이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안철수에게 ‘경제민주화’란 대자본가와 중소자본가 사이의 공정한 경쟁 문제일 뿐이다. 그래서 안철수는 쌍용차 노동자들과, 김진숙과 에스제이엠과 현대차 하청 노동자들, 그외의 수많은 싸우는 피억압자들에게도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하는 물음이 나오는 것이다.

게다가 스스로 ‘안보’는 ‘보수’라던 안철수의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멘토’는 윤영관이라고 한다. 최근 안철수가 발표한 ‘균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다자 간 외교’와 ‘업그레이드 포용정책’은 노무현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 출신 윤영관이 오래전부터 해 온 주장이다.

그러나 윤영관은 당시 친미 외교를 주도해 노무현 정부 내에서조차 이른바 ‘동맹파’로 분류됐고, 이라크 파병을 추진한 장본인이었다. 윤영관은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천안함 사건 당시에도 정부에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등 매우 보수적인 인물이다.

요컨대, 이현재·장하성·윤영관과 한 배를 탄 안철수의 정치는 새로운 것이 없고, 그의 구상이 구체화하면 할수록 ‘안철수 현상’과 안철수 사이의 모순은 더 커질 수 있다.

이현재

안철수의 ‘혁신경제’와 이현재

시장과 관료에 대한 굴복과 실패의 예고

9월 19일 안철수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장에 전 경제부총리 이현재가 나타나 공개적인 지지를 밝혔다. 이른바 ‘모피아’의 대부라고 불리는 이현재가 안철수의 ‘경제 멘토’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안철수 대선캠프의 금태섭 상왕실장은 “내년 세계경제가 위기를 맞을 텐데 그 과정에서 이 전 부총리가 가진 지혜가 도움될 것”이라며 이현재 영입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현재가 경제 위기 때 보여 준 ‘지혜’는 대량 정리해고, 공공부문 민영화, 가계대출 방조, 금융 자유화 등으로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었다.

이현재는 김대중 정부 시절 금융감독 위원장과 재정경제부 장관을 거쳐며 4백개가 넘는 금융기관과 재계 2위의 대우그룹을 퇴출시켰다. 그로 인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노동자들이 거리에 넘쳐났다.

이현재는 외환은행 불법 매각에도 책



2001년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

임이 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일 때 이현재는 론스타의 법률 자문을 맡은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이었다.

또, 이현재는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를 주도하고, 최근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거품에도 일조한 인물이다.

금융감독원장이었던 1999년에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를 폐지해, 신용카드 대란을 가속화시켰다. 참여정부 경제부총리로 있을 때는 종합부동산세를 누더기로 만들고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를 연기시키고 분양권이 공개 반대에 앞장서, 부동산 거품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

결국 안철수는 스스로 한국 경제의 주요 문제로 지정한 ‘경제적 집중’과 ‘양극화 심화’를 주도한 장본인을 ‘경제 멘토’로 삼고 있는 것이다.

장본인

그러나 이현재가 안철수의 ‘경제 멘토’로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현재가 경제 수장일 때 주도했던 벤처 투자붐 속에서 성공한 게 바로 안철수다. 두 사람의 경제 현실 진단과 해법도 일치한다.

안철수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 거듭 “마치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경제민주화, 복지뿐 아니라 혁신적인 경제가 뒤따

라야 한다”며 ‘혁신경제’를 화두로 내세우고 있다.

청년층에 대한 창업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혁신과 성장을 이루면 일자리와 복지 재원이 늘어나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가 이뤄지고, 이는 다시 ‘혁신경제’의 디딤돌이 된다는 논리다.

이런 문제의식은 이현재가 최근 발간한 《경제는 정치다》에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해 내는 창조경제가 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게 된다”며 한국 경제의 대안으로 ‘창조경제, 창의기업, 열린 시장·사회’를 제시한 것과 같다.

이처럼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하려면 경제 성장이 꼭 필요하다는 논리는 사실 새누리당 같은 우파의 전통적인 논리였다.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창업 지원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점이 우파들과의 차이점이긴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세계 각국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창업과 도전을 유도에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안철수의 ‘혁신경제론’은 허황돼 보인

다. 결국 경제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동안 안철수가 주장해 온 경제민주화나 복지 확대도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

그런데 이미 불길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 ‘경제 멘토’인 이현재는 신자유주의자에 걸맞게 최근 전직 재정부 장관들이 주도해 만든 ‘건전재정포럼’에 참여해 복지 확대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또, 이현재에 대한 비판을 피해 가려고 안철수 쪽이 새롭게 내세운 장하성 교수도 “복지는 국민 모두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지 재벌들에 세금을 더 내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비슷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안철수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도 “주위 담을 수 없는 (복지)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안 후보 스타일도, 내 스타일도 아니다”며 재정건정성을 강조했다.

안철수가 설사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대기업·부유층과 경제관료에 굴복한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강동훈

고조되는 동아시아 영토 분쟁

또 다른 뇌관이 될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하라

제국주의적 경쟁과 갈등의 격화가 동아시아에서 일련의 영토 분쟁과 군사적 충돌로 나타났다. 천안함 사태, 연평도 상호 포격, 난사군도 주변에서 벌어진 대규모 군사훈련, 닌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에서 일본과 중국이 충돌한 것이 그 결과다.

일련의 분쟁은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과 기존 동맹국들의 합동군사훈련 → 중국의 해군력 증강 → 이를 견제하기 위한 동아시아의 주요 요충지가 될 만한 섬 주변의 군비증강'으로 이어졌다. 급기야 미국은 동아시아 주요 해역에 항공모함 2개 전단을, 중국은 핵 잠수함과 미사일 부대를 배치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금 동아시아가 군비증강이 가장 급속하게 이뤄지는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시아 군비증강과 중미 갈등의 주요 무대 중 하나는 동아시아의 도서 지역들이다. 중국이 남중국해·동중국해의 군사기지들을 해군력 증강의 주요 교두보로 삼고 있고, 미국은 유사시 중국 본토를 공격하기 위해 이 지역을 핵심 전진 기지로 삼으려 한다.

미국이 오키나와 후텐바 미군기지에 신형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를 배치한 것도, 대만에서 겨우 1백 킬로미터 남짓 떨어진 요나구니 섬까지 일본 자위대가 방어선을 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가 있다.

동아시아 해상 요충지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지금,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데 발판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견제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이어도에 중국이 무인항공기를 배치해 해역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한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백49킬로미터, 중국 동쪽 톱다오에서 불과 2백47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수중암초가 동북아 영토 분쟁의 새로운 지역으로 추가될 수도 있다.

네 번째 시도

사실 제주도는 동아시아에 배치된 미국의 군사력이 재편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군사기지화 대상이 돼 왔다. 정영신은 '동아시아 지평에서 바라 본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문제'라는 논문에서 제주도와

동아시아 해상 요충지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지금,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데 발판이 될 것이다.

오키나와 문제를 동아시아의 체제 변동의 역사와 연결시켰다.

그에 따르면 제주도 군사기지화 압력은 네 번 있었는데, 모두 세계 강대국 질서가 재편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1945년 2월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던 일본은 결전 계획인 '결7호작전'을 기획했는데, 이것은 제주도를 군사기지화하는 것이었다.

오키나와에서 미군과 일본군 사이의 격렬한 지상전이 벌어졌을 때, 제주도에서는 본격적인 기지화 작업이 진행돼 병력 7만 5천 명이 집결하고 동굴진지와 비행장이 건설됐다.

일본의 항복 이후에도 제주도는 거듭 군사기지 건설 대상이 됐다. 미국의 경제력 쇠퇴와 베트남전 패배, 일본의 부상 등으로 오키나와 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의 보수 우익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다. 그래서 이들은 오키나와의 대안으로 제주도에서 군사기지를 만들 것을 미국에 제안한다.

1969년 박정희는 제주도를 공군기지와 해군기지로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미당국자들에게 여러 차례 확인해 줬다. 오키나와 미군기지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제주도 군사기지 건설은 중단됐다.

냉전 해체 분위기가 고조되던 1980년대 말에 필리핀에서 미군기지 철수 운동이 강력하게 벌어지자, 미국은 필리핀에서 철수할 경우 공군은 싱가포르나 괌으로, 해군은 일본의 사세보나 한국의 남부 항구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했다. 미국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했다.



아름다운 제주를 위협하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중단돼야 하고, 우리는 진정한 '해적'인 제국주의에 맞서야 한다.

그런 분위기에서 당시 노태우 정부는 제주도 송악산 일대와 서산 해미 등 여러 곳에 공군기지 확충을 시도했다.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 때문에 수포로 돌아갔지만 말이다.

한국 정부와 해군이 현재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말라카 해협의 '해적'은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그 피해액은 건당 5천 달러 정도에 불과했다. 게다가 2005년 말라카 해협을 지나간 상선 6만 3천 척 중 해적들에게 공격받은 선박은 9척에 불과했다.(참여연대 제주 해군기지 관련 이슈 리포트)

또, 미군이 해군기지 시설을 활용하려면 한국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지만, 아직도 서울 퍼렇게 살아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SOFA 10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미군 함정은 한국 항구에 입항할 때 '통고'만 하면 된다.

친미 우익을 대표하는 박근혜의 입장에 대해서는 달리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안철수와 문재인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분명하게 반대하지 않는다.

안철수는 자신의 책 《안철수의 생각》에서 "대의 정책에서 각자 다른 색깔을 취해 온 정부들이 모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며 기지 건설 찬성 입장을 냈다. 문재인은 공사는 중단돼야 하지만 제주 해군기지는 찬성한다는, '네모난 삼각형' 같은 모순된 입장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이를 중단시키면 동아시아 긴장 고조를 막을 하나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하는 생명평화대행진이 대선을 앞두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전국을 일주하고, 11월 3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기로 한 것은 의미 있다.

김어진

남수단 파병은 수단의 비극을 악화시킬 뿐이다

9월 27일 국회는 아프리카 남수단에 평화유지군을 보내는 파병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방부는 남수단의 재건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남수단 파병은 그동안 수단을 괴롭혀 온 제국주의 지배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공병과 의무병 중심이라는 말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국방부는 아프가니스탄에 지방재건팀을 파병할 때도 같은 말을 했지만, 이후 내부적으로 기동타격대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수단의 역사는 제국주의가 저지른 만행의 역사다. 20세기 초 영국은 수단을 식민 지배하면서 남북을 분리시켰고, 나중에는 수단 남부인과 북부 무슬림이 전혀 다른 민족이라고 선포하며 분열을 부추겼다.

1956년 수단은 영국에게서 독립했지만, 곧 남과 북 사이에 내전이 발발했다. 1984년에 수단 남부에서 석유가 발견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다.

1980년대 미국은 자국 석유 기업 쉘브론이 수단 남부에서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북부 정부를 지원했다. 1990년대 초 이슬람주의 정권이 들어서자 쉘브론은 철수했고, 미국은 수단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리고 포격을 가했다.

2000년대 초 수단 지배계급이 분열해 권력을 놓고 서로 싸우면서, 그 결과로 수십만 명이 사망한 다르푸르 학살이 발생했다.

석유

그 사이에 중국이 끼어들어서 수단 석유 사업의 3분의 2를 장악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오랜 내전 끝에 치뤄진 남수단 분리 선거에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려고 이번엔 남수단을 지지했다.

이처럼 제국주의 열강들은 오직 수단의 석유에만 관심이 있었다.

수단 석유의 대부분은 남수단에 묻혀 있다. 한국군이 남수단에 파병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남수단이 안전하다는 국방부의 말도 거짓말이다. 남수단의 독립 이후에도 남과 북 사이에는 폭격기를 동원한 충돌이 계속됐다. 최근 '국경없는 의사회'는 치안 불안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중단했다.

한국군 파병은 수십 년간 수단 민중을 괴롭힌 제국주의 지배를 강화시키고, 한국 청년들을 위험으로 내몰 뿐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미 군대를 파병한 5개국(아프가니스탄, 레바논, 소말리아, 아이티, 아랍에미리트)의 파병 연장 동의 안도 준비 중이다. 이들 나라에서도 한국군은 해당 지역의 분쟁 가능성을 높이고 제국주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번처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언제 싸웠냐는 듯이 사이좋게 이것을 통과시키려 할 것이다. 진보진영은 남수단 파병 결정 즉각 철회와, 모든 파병 한국군 즉각 철수를 주장해야 한다.

김종환



런던에 사는 수단인들이 6월 30일 독재와 긴축에 반대하는 모국의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 수단의 비극은 제국주의 군대가 아니라 민중 자신의 투쟁으로 끝낼 수 있다.

다시 듣는 맑시즘2012 ②

대선과 사회주의자들의 관점

2012 대선을 둘러싼 관심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레프트21> 전지윤 기자가 대선을 앞두고 사회주의자의 올바른 관점은 무엇인지 주장한다. 이 글은 올해 7월 고려대에서 개최된 한국 최대 진보포럼인 '맑시즘2012'에서 한 연설을 축약한 것이다.

요새 신문을 보면 그 어떤 것보다 박근혜 말 한마디가 더 큰 뉴스가 된다. 그러나 역대 대선 투표율을 보면 쪽 하락해 왔다. 많은 사람들이 '과연 투표한다고 내 삶이 바뀌는가'란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이는 타당한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진정한 권력은 우리가 선출한 의원이나 대통령에게 있지 않고 선출되지 않는 언론 사주나 재벌 총수 같은 자들에게 있다. 그래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 국가를 노동자 평의회를 바탕으로 한 '노동자 국가'로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선거보다는 아래로부터 투쟁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마르크스의 동료였던 엥겔스는 선거가 노동계급의 온도에 같은 거라고 했다. 선거 결과는 노동계급의 자신감, 의식 등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 보여 주는 지표라는 것이다.

온도가 자체가 온도를 높이고 낮추는 것은 아니지만, 온도를 보고 사람들이 열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한 결과를 보고 사람들은 일시적 '행복'을 느꼈다.

사실, 1년 전만 해도 새누리당은 승산이 별로 없었다. 이명박 5년의 학습 효과 때문에 사람들이 '747', '성정' 같은 것에 신물이 나고, 복지와 분배에 관심이 커졌다. 그래서 2010년 지방 선거에서 무상 의료, 무상교육, 무상급식, 그리고 반값 등록금, 즉 '3무 1반'이 유행하며 한나라당이 대패했다.

공지에 물린 우파를 대변한 오세훈은 이를 뒤집으려고 배수의 진을 치고 무상급식 주민 투표를 했다. 그러나 그것도 참 패하면서 한나라당은 더욱 몰락했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이 당선하면서 박근혜 대세론은 붕괴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왜 박근혜 대세론은 다시 살아났는가? 여기에는 민주당의 구실이 컸다. 민주당은 올해 총선 때 밥상을 차려 놓고 숟가락으로 밥을 퍼 줘도 못 먹었다. '김용민 막말'이나 진보당과 손잡고 좌를 길들여가 아니었다.

이번 총선은 역대 총선 중 득표율도 낮은 투표율이었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투표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찍을 놈'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명박이 FTA, 제주 해군기지 등 잘못된 정책들을 강행했는데 민주당은 이런 문제들에서 계속 오락가락했다.

"좋은 FTA", "나쁜 FTA"를 운운하는 민주당을 사람들은 별로 신뢰하지 못했다. 게다가 민주당은 총선 때 김진표와 뉴라이트 출신까지 공천했다. 이런 걸 보며 사람들이 굳이 민주당을 찍으려 투표장까지 가야 하는지 생각했던 것이다.

반면에 우파는 강력하게 결집하며 박근혜 대세론을 부활시켰다. 우파는 '이명박 저우기'를 했고, 당명을 바꾸며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복지 등을 내걸었다. '우리는 이명박과는 다른 당이고, 경제민주화를 하려는 당이다' 하는 식으로 우파 지지층이 주변 사람들을 설득할 명분과 자리를 제공했던 것이다.

그리고 FTA나 제주 해군기지 정쟁에

서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민주당이 바로 너희가 싫어하는 FTA를 시작했고 제주 해군기지를 찬성하는 자들인데도 찍을래?' 하고 묻은 것이다. 결국 많은 젊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패배했다.

확장성의 한계

그럼에도 박근혜는 여전히 2퍼센트 부족하다. 박근혜의 강점은 '하늘이 무너져도 새누리당을 찍는다'는 약 30퍼센트의 보수층을 최대한 결집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반면 박근혜는 지나치게 우파적이라는 반감이 젊은층에서 존재한다. 박근혜의 주변에서 조언해 주고 있다는 '7인회'가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그 인물 면면은 바로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주요 구실을 한 부패한 수구 인사들이었다. 박근혜의 5·16 관련 발언 등을 보면 끔찍하다. 이것 때문에 '확장성의 한계'라고 그의 주변에는 항상 늙은 사람들만 몰려든다.

'선거의 여왕'이라는 박근혜가 막상 구원투수로 등장해 표를 모았던 때는 대부분 우파가 위기에 몰려 보수 결집이 필요했을 때다. 즉 표를 확장하려 할 때보다는 보수표를 결집하려 할 때 박근혜가 등장하는 패턴이었다.

이번 총선에서도 박근혜가 이기긴 했지만, 막상 우파가 얻은 표를 다 합친 것보다 소위 '진보개혁진영'이 얻은 표가 더 많았다. 게다가 박근혜는 대선 출정식 이후 해신의 부작용이라 할 법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어울리지 않는 해신을 한다며 당명도 바꾸고 경장정책 첫머리에 복지국가를 넣었지만 막상 시험대에 오르자 분열과 모순이 나타나는 것이다.

3의 대안이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박근혜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반면, 안철수는 소름 이미지이다. 많은 젊은 층들이 절망에 몰려고 있는 상황에서 능력 있고 성공한 멘토라는 이미지도 있다.

그러나 안철수는 자신이 사회를 바꾸고,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가 모호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원측만이 아니라 오른쪽에서도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안철수 자신도 '나는 진보도 보수도 아닌 상식'이라고 얘기한다.

사실 안철수는 성공한 자본가다. 이번 77퍼센트가 '나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도, 새누리당도 아닌 제3의 대안이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77퍼센트가 '나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도, 새누리당도 아닌 제3의 대안이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77퍼센트가 '나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도, 새누리당도 아닌 제3의 대안이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동료였던 엥겔스는 선거가 노동계급의 온도에 같은 거라고 했다.

선거 결과는 노동계급의 자신감, 의식 등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 보여 주는 지표라는 것이다.



유력 대선 후보 누구도 노동자·서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대변 않는 불만한 진실 결국 진정한 전투는 대선 이후 거리와 작업장에서 벌어질 것이다.

3의 대안이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박근혜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반면, 안철수는 소름 이미지이다. 많은 젊은 층들이 절망에 몰려고 있는 상황에서 능력 있고 성공한 멘토라는 이미지도 있다.

그러나 안철수는 자신이 사회를 바꾸고,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가 모호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원측만이 아니라 오른쪽에서도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안철수 자신도 '나는 진보도 보수도 아닌 상식'이라고 얘기한다.

사실 안철수는 성공한 자본가다. 이번 77퍼센트가 '나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도, 새누리당도 아닌 제3의 대안이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77퍼센트가 '나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도, 새누리당도 아닌 제3의 대안이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동료였던 엥겔스는 선거가 노동계급의 온도에 같은 거라고 했다.

선거 결과는 노동계급의 자신감, 의식 등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 보여 주는 지표라는 것이다.

를 일으켰기 때문에 우파를 패배시켰던 것이다.

독자적 목소리

그런데 진보진영은 갑갑한 상황이다. 통합진보당은 '박근혜만 아니면 누구든 좋다'는 논리로 급진적 성격의 강령을 후퇴시키고, 민주당 이류라 할 수 있는 참여당과 통합했다. 선거에서도 '물지마 아권 언대'를 했다. 덕분에 통합진보당이 총선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다. 우선 진정한 정점이 흐려졌다. 예컨대 무상급식 정점에서 새누리당이 '이건 죄송하지만 서울대에서 '기업가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강의하기도 했다. 안철수는 FTA를 하면서 복지를 할 수 있다거나, 제주 해군기지를 지으면서 평화를 이룰 수 있거나, 국가 경쟁력을 높여서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모순된 주장이 있다. 사실 민주당과 비슷한 주장이지만 안철수의 지지율은 높다. 신뢰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안철수의 딜레마는 대선을 앞두고 결국 낡은 정치를 상징하는 민주당과 손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다. 반면,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박원순은 선거 끝까지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았다. 그래서 '민주당 표대가 안철수 표단'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는 논리적으로 단순한 얘기라 할 수 있다.

2002년도에도 노무현 표대가 정동준 표를 더해서가 아니라 '호순이 미션'이 암사 항의 투쟁'이 젊은 유권자들에게 열기

한 진보당의 위기를 이용해 우익이 득세하기만 했다.

물론 불가피한 상황에서 민주당과 제휴할 수 있다. 예컨대 쌍용차 집회에 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참가해 투쟁을 지지하고 자기도 함께하겠다고 했는데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을 믿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항상 투쟁에 제일 늦게 왔다가 제일 먼저 빠지고, 빠지면서 꼭 우리의 뒤통수를 쳤다. 따라서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휴를 하더라도 민주당한테 주도권을 주지 말아야 하고 비판을 삼가선 안 된다.

무엇보다 진보의 독자적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 마르크스는 1848년에 이렇게 말했다. "당선 가능성이 없더라도 노동자들의 독자적 후보를 내세워 정치적 입장을 제시해야 된다." 즉 문재인이나 안철수가 할 수 없는 주장들을 진보 후보가 하면서 투쟁을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2007년 대선에 권영길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랜드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누가 대변했겠는가. 이명박은 물론이고, 이랜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경찰력을 세 번이나 투입한 정부를 계승한 정동영도 그럴 수 없었다.

물론 막판 단일화 압력을 피하지 힘들다. 올해 프랑스 대선에서도 좌파전선 후보 멜랑송이 1차 투표에선 독자 출마했다. 그러나 결선 투표에서 멜랑송은 우파 사르코지에 맞서 사회당 올랑드 후보에게 비판적 투표를 했다. 사회당과 독립적인 투쟁을 주장하면서도 표는 던

진 것이다.

아쉽게도 이 나라는 결선 투표가 없고, 막판에 문재인이나 안철수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문재인이든 안철수든 '다치고' 지지는 안 된다. 멜랑송도, 사르코지에 맞서 이미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던 사회당과 올랑드를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올랑드가 집권하면 약속을 어기고 노동자들을 공격할 것이므로 그 정부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진보진영이 만일 민주당이나 안철수와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된다면 노동계급을 공격하는 처지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연립정부는 절대 안 된다.

하지만 비판적 투표는 가능하다. 박근혜와 안철수, 또는 박근혜와 문재인이 대결하는데 그냥 그 둘이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선거

주의자들에게 투표는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겠지만 혁명가들에게 투표는 부차적인 것, 전술일 뿐이다. 당장 자본주의 국가 자체를 위협할 만한 혁명적 투쟁이 벌어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보아맞하기보다 선거에 참여해서 분명한 비판과 함께 투표할 수 있다.

불가피한 타협

러시아 혁명가 레닌은 '혁명가들은 정세에 따라 종종 불가피하게 타협할 수 있다'고 했다. 자유주의 후보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타협인 것이다. 사실 5·16이 '구국의 혁명'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그걸 비판하는 사람을 대다수 노동자들이 똑같이 볼 리는 없다.

하지만 비판적 투표는 가능하다. 박근혜와 안철수, 또는 박근혜와 문재인이 대결하는데 그냥 그 둘이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선거

선거주의자들에게

투표는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겠지만

혁명가들에게

투표는 부차적인 것, 전술일 뿐이다.

투표는 부차적인 것, 전술일 뿐이다.

투표는 부차적인 것, 전술일 뿐이다.

투표는 부차적인 것, 전술일 뿐이다.

투표는 부차적인 것, 전술일 뿐이다.

투표는 부차적인 것, 전술일 뿐이다.

투표는 부차적인 것, 전술일 뿐이다.

투표는 부차적인 것, 전술일 뿐이다.

투표는 부차적인 것, 전술일 뿐이다.

투표는 부차적인 것, 전술일 뿐이다.

정리 발언

안철수가 2030 세대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의 하나는 사회구조를 탓하지 말고 좋아 하는 일에 도전해 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커녕 취직도 못하게 만든 사회구조가 있는데 그걸 노력한다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얼마 전 영국의 한 독립적인 연구소가 세계은행의 통계를 통해 조사한 것을 보면 한국의 부자들이 투기를 벌일 때만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은 결코 의회 등에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



8월 23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대회

박노현 사퇴 이후

교육 개혁 되돌리기를 막아야

최근 대법원이 박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형을 확정 판결했다. 결국 박노현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박탈 당하고 구속·수감됐다. 수억 원 대의 공천 비리 범죄자인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백주기'하는 법원이, 박노현 교육감에게 '사후배수죄'를 들이밀며 구속한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다. 박노현 교육감이 진보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비판을 받을 부분은 있지만 '찍김', '찍김'에 온갖 패배와 모욕로 가득한 검찰과 법원은 박노현 교육감을 법적으로 처벌할 자격도 근거도 없다. 이것은 사법부가 진보·개혁을 반대하는 우파의 보수 구실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박노현 구속을 기회 삼아,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복심'으로 불리 는 서울시 교육감 권한 대행 이대영은 '학교 현장에서 총돌을 일으킨 정책을 바로 잡겠다'며 우파적 반동을 밀어붙이려 한다. 이대영은 박노현 교육감이 추진한 혁신학교와 무상급식 확대에 제동을 걸고, 학생인권조례도 무력화하려 한다.

임기 4개월 남은 이명박 정부도 교사를 줄세우며 경쟁교육을 강화하는 교원평가 시행을 의무화하고 평가에 따라 연수를 강화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또, 2011년 법정 교원 수에 견줘 교사가 4만여 명 부족한데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급 당 정교사 기준을 없애려 한다. 이미 기간제 교사 비율이 20퍼센트에 이르는데도 이런 개혁을 통해 비정규직 비율을 더 늘리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국가 공무원인 교사들의 신분을 지방 공무원으로 바꾸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교사들의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노동 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

정부와 우파의 이러한 일련의 공격은 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과 맞닿아 있다. 긴급 정책을 펼치며 학교를 구조조정하면서 교사의 조건을 더욱 후퇴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반격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를 강요하는 등 학생 인권 '무늬'적 홍보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우파들은 선거를 앞두고 학교폭력 문제를 부각해 학교 내에서 통제와 억압 조치를 강화하며 우파를 결집하고, 사회 전체를 우경화시키는 소재로 삼으려 한다. 교육은 없고 처벌과 통제만 강화하는 학교 폭력 대책이 낡은 스트레스 때문에 최근 한 교사가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듯 정부의 강요는 학생과 교사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진보진영은 최대한 광범하게 단결해 저들의 공세에 맞서야 한다. 특히 박노현 교육감의 교육감직 박탈로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12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므로 교육 정점이 더 뜨겁게 제기될 수 있다.

이번 상황에서 진보진영은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 온 진보적 교육 개혁 과제를 분명히 제기하고, 우파의 공세에 맞선 저항과 투쟁을 결집하면서, 다시금 서울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하도록 힘을 결집해야 한다.

지난 9월 초 전교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교원평가 법제화와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방침에 맞서 실질적 투쟁을 건설하는 수장단이 통과된 것은 기존 교사들의 불만이 크고, 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또 기간제 교사 2천4백여 명이 성과급 차별에 반대하는 소송에 동참하는 등 학교에서 오랫동안 차별받으며 숨죽여 온 기간제 교사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령살인'을 거부하고 11월 9일 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도 학교 현장에 커다란 자극과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 강원도 광주 등에서 교육감 직접교을 전화와 정년 보장을 받는 등 소중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10개 교육감이 맞서 전면적인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공세에 맞서 이런 투쟁은 더욱 확산돼야 한다. 최근 미국 시카고 교사들이 단호하게 파업을 벌여 성과급제를 날려 버리고 승리를 거뒀듯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오는 11월 3일, 전교조 등 진보 교육 운동 단체들이 힘을 한데 모아 '경쟁이 아닌 협력'을, 차별이 아닌 지원'을 요구하며 건설하고 있는 대규모 집회는 그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진보진영은 그 속에서 진정한 교육 개혁을 위한 동력을 형성해야 한다.

정선영

독자·정리 오영숙

미국 대선

“오바마에 대한 냉소 속에 반격도 자라고 있어요”

미국 대선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가디언>, <네이션> 칼럼니스트이자 브루클린대학의 교수를 역임한 작가 개리 영이 오바마 정권의 성적과 미국 노동계급 사이에서의 분위기에 대해 말한다. 이 인터뷰가 미국 대선의 쟁점과 구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년 전 미국 대선에서는 낙천적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4년 전에 비해 지금은 많이 바뀌었나요?

2008년에는 사람들이 흑인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에 정말 기뻐했어요. 그 사실이 뜻하는 바를 깎아내릴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또 실질적인 변화라고 과장해서도 안 돼요. 변화는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미국이 전쟁과 인종차별주의를 넘어 새로운 길로 가기를 바라는 진실한 요구도 있었죠. [그러나] 오바마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그런 희망의 구현인 것처럼 포장했어요.

2008년 선거는 자본주의가 완전히 붕괴되는 와중에 치러졌어요. 당시는 정말 새로운 게 필요하다는 진실한 요구가 있었던 때고, 오바마는 새로워 보였고 자기가 새로운 양 행동했죠.

하지만 그가 변화를 일으키진 않았어요. 흑인도 백인만큼이나 체제를 자본주의적이고 인종차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거죠.

오바마의 당선은 지배자들에게 흑인의 미국을 받아들이라는 통보였지만,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뭔가 해낸 건 없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오바마를 어떻게 보나요?

사람들이 오바마를 좋게 봐 주고자 하는 것을 과소평가해선 안 돼요. 하지만 냉소가 있죠.

오바마는 자기가 왼쪽에서 도전받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미등록 이주자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단속당하지 않고 머물 수 있게 한 거예요.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는 목소리도 났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하면 사실과도 다르고 게으른 분석일 거예요. 이라크에서 전투병이 철군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전쟁이 끝날 날이 보이고요. 대법원에 여성 법관이 둘이나 들어갔고, 그중 한 명은 라틴계예요. 하지만 이로는 불충분하고, 변화가 더 많아져야 해요.

2008년에 오바마는 투표 참여율을 바꿨어요. 많은 청년, 흑인, 라틴계 사람들이 찍을 만한 후보가 있다며 투표장에 왔어요. 4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그때만큼 오바마에게 빠져 있지는 않아요.

아마 라틴계가 가장 많이 실망했을 거예요. 라틴계 사람들은 1950년대 이래 가장 많은 비율이 추방되고 있어요. 많은 청년들이 오바마에게 투표했지만, 지금은 청년 실업이 늘어나고 있죠.

롬니와 오바마 모두 노동계급의 지지를 얻으려 합니다. 그들의 시도는 성공적인가요?

롬니는 자기가 노동자들의 요구와 교감하고 있는 것처럼 연기해요. 하지만 롬니 혼자 보유한 재산이 하위 8퍼센트가 보유한 재산을 다 합친 것의 갑절이나 되죠.

조지 부시는 ‘보통 사람’인 척하는 걸 정말 잘했어요. 롬니는 그런 능력이 없지요.

그러나 오바마가 “나는 롬니보단 부자를 덜 챙기는 편이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바마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건강보험료 문제로 씨름해야 했다는 등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바마는 명문 사립고를 다녔지만 노



사진 출처: Fairfax County (플리커)



사진 출처: Sarah (플리커)

(위) 경기 침체 속에 채용 박람회에도 줄을 선 구직자들. (아래) 오바마 정권의 교원평가제에 맞서 파업을 벌여 승리한 시카고 교사들.

“미국인들이 자기 자신과 미국에 대해 생각하는 관점이 도전받고 있어요. 자기 아이들이 자기보다 더 못살 거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동 빈민들과 연결점이 있다고 할 만하긴 해요. 오바마는 지역사회 활동가 출신이고 노동계급과 같이 일하기도 했어요.

이번 선거에서 인종차별주의 문제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역대 선거에서 가장 인종적 양극화가 심한 선거가 될 거예요. 인종차별적 편견들이 엄청 나올 거예요.

놀랍게도, 오바마가 무슬림이라고 생각하는 공화당원의 숫자가 지난 선거 때보다 두 배나 늘었어요. 흑인이 대통령 되는 꼴을 못 봐 주는 많은 사람들이 롬니를 찍었죠.

오바마의 인종 문제는 그냥 피부색 문제가 아니에요. 2042년쯤이면 백인은 미국에서 인종적으로 소수 인종이 될 거고, 꽤 많은 백인들이 그 사실을 달가워하지 않죠.

그 자신이 이주민이기 때문에 오바마

는 그들에게 ‘세계화의 공포’를 상징해요. 세계화와 해외 무역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사람들은 공화당원들이죠.

게다가 오바마의 아버지는 무슬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이 이라크에서 한 차례 패배하고 뚜렷한 성과 없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떠나는 시대죠.

한편 롬니는 백인이 아닌 사람들의 적대감을 불러일으켰어요. 롬니가 이기려면 백인 표 61퍼센트를 획득해야 해요.

미국 선거에서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차별 코드는 아직 통해요. 하지만 라틴계 인구가 늘어나고 백인 인구가 줄어들면서 예전처럼 강력하게 작용하지 않을 뿐이죠.

어느 공화당원이 말하길, 이런 선거는 다시는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티파티는 백인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실제로 이길 수 있는 시기의 마지막 안간힘입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은 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국제 쟁점 가운데 회자될 만한 쟁점은 유럽 문제뿐이에요. 공화당은 민주당 정부의 ‘퍼주기’ 정책이 미국을 그리스처럼 만들 거라고 말해요. 민주당은 긴축이 미국을 유럽 스타일의 위기로 몰아넣을 거라고 말하고요.

근본에서 이 문제 또한 경제 쟁점이에요. 다른 쟁점이 이 문제를 제치고 튀어 나올 가능성은 낮는데, 다른 문제를 제기할든 어느 쪽이든 득을 보지 못할 게 뻔하니까요.

공화당은 이스라엘 문제를 쟁점화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이라크나 아프가니

스탄 문제를 쟁점화하지는 정말 못할 거예요. 애초에 그들이 냈다가 실패한 아이디어였으니 말이에요. 오바마는 이라크 문제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언급할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를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문제도 아직 정리가 안 됐고요.

제3당 후보가 부상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꽤 낮죠. 오바마는 미국 선거 판에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의 후보였어요. 이렇게 말하면 미국 선거 판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겠죠. 미국 선거 제도는 제대로 된 제도가 아니에요.

선거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돈을 생각해 보면, 현재 제3당이 돌파구를 만들 가능성은 없어요. 수십억 달러라도 갖고 있다면 모를까.

이 말이 사람들이 선거에 그들의 주장을 전하기 위해 일어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미국의 선거 제도는 매우 제한적이예요. ‘돈 가진 놈 마음’이라는 황금률에 따라 움직이는 곳이죠.

아래로부터의 운동은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월가 점거 운동 전에는 구제금융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주로 우익 포퓰리스트나 티파티 같은 자들이었어요. 이전 심지어 공화당도 자신이 자본주의의 수호자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고 말해요. 그랬다간 많은 사람들이 공화당을 월가의 수호자라고 간주할 것이라면서 말이죠.

월가 점거 운동은 불평등이 문제라고

말함으로써 논쟁의 지형을 옮겨 버렸어요. 좌파의 활동이 급부상했고, 이전 변화를 위한 최고의 기회죠.

흥미롭게도, 이런 일들이 오바마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으면서 일어났어요. 월가 점거 운동에서 오바마 이름은 거의 안 나왔죠.

노동자·서민이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격에 나서고 있어요. 심지어 월가 점거 이전인 2010년 2월에도 미국인 36퍼센트가 사회주의를 긍정적으로 본다곤 말했어요.

미국인이 자기 자신과 미국에 대해 생각하는 관점이 도전받고 있어요. 자기 아이가 자기보다 더 못 살 거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시카고에서 교사들은 민주당 시장과 민주당 체제에 맞서 싸웠어요. 공화당은 교사들을 비난했고요. 노동자 권리를 방어해 줄 사람 같은 건 선거 정치 판에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죠.

이 때문에 세력 균형에 도전할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커졌어요. 가끔 성과도 얻었고요.

라틴계 청년들의 캠페인이 그들을 대하는 오바마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어요. 오바마가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는 선언은 거리에서 벌어진 운동과 로비에서 나온 거고요.

이런 것들이 변화를 만들어 내요. 승리를 보장할 순 없지만, 투쟁하지 않으면 진다는 건 확실해요.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2호 / 번역 김인수

논쟁

시리아 혁명에 대한 올바른 입장은 무엇인가

최근 터키와 시리아의 공방전을 빌미로 시리아 혁명에 대한 서방 제국주의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방의 군사 개입에 반대하면서 시리아 혁명을 지지해야 할 이유를 살펴본다.

2011년 3월에 시작된 시리아 혁명이 18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다. 이미 2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됐다. 이토록 큰 희생을 치르면서도 시리아 민중은 영웅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내외 좌파 사이에서 시리아 혁명에 관한 혼란이 있다. 이런 혼란 때문에 많은 좌파가 시리아 혁명을 흔쾌히 지지하지 않는 잘못된 태도를 보인다.

첫째는 시리아 정권을 사회주의로, 적어도 반제국주의 정권으로 보며 혁명 세력을 서방 제국주의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하는 관점이다.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시리아 정권은 진정한 사회주의와 전혀 관계가 없었다. 오히려 자국 민중을 억압하는 독재정권이었고 반제국주의 투쟁에서도 일관성이 없었다.

1970년 하페즈 알 아사드(현재 대통령인 바샤르 알 아사드의 아버지)는 시리아 좌파를 말살하며 집권했다. 그 뒤 40년 동안 시리아 내에는 이렇다 할 좌파가 형성되지 못할 정도로 정권의 탄압이 극심했다.

하페즈는 1976년에 레바논에 군대를 보내 친서방 정부에 맞선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민중의 연합 항쟁을 파괴했다. 하페즈는 1990년대 초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도왔고 그의 아들이자 현 독재자인 바샤르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2000년 바샤르 집권 후 더욱 빨라졌다. 기존 국유기업을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정권 실세와 측근은 막대한 부를 쌓았지만 대다수 민중의 삶은 궁핍해졌다. 지난해 혁명이 시작되기 전 시리아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빈곤층이었다. 전체 실업률은 25퍼센트였다. 시리아에서는 30세 미만 이 전체 인구의 65퍼센트를 차지하는데,



시리아의 젊은 혁명가들 (Hakim Haddad)

9월 28일 시리아 알레포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 시리아 혁명은 중동 민중 반란의 일부이므로 혁명을 분명히 지지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서방 제국주의가 혁명을 굴절시킨다면, 이는 시리아 민중에게 재앙적 결과를 낳을 것이므로 우리는 서방 개입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서방 개입 반대와 시리아 혁명 지지를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25세 미만 청년 실업률이 55퍼센트에 육박했다. 즉, 시리아 혁명에도 튀니지, 이집트 혁명과 마찬가지로의 동역하이 작용한 것이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혁명을 제국주의의 꼭두각시로 여기는 것은 민중을 깔보는 엘리트주의적 관점이다. 이런 관점

은 민중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지극히 반동적인 관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이 관점은 의도치 않게 서방 제국주의의 힘을 과대포장한다. 제국주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대중을 조종해 민중 항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제국주의를 이길 도리가 없다.

변질

둘째는 아사드 정권의 진보성은 인정하지 않지만 서방 제국주의와 친서방적 겉표 국가들이 개입하면서 시리아 혁명이 변질됐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들은 이제 반제국주의 투쟁이 시리아 혁명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는 운동 내 일부 세력인 시리아국가위원회(SNC) 등이 서방 개입을 바라고 서방과 친서방 겉표국들이 이에 호응한다는 점이다.

SNC가 서방의 지지를 받고 자유시리아군(FSA) 내 일부 부대가 겉표국들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리아 혁명의 성격이 완전히 변했다고 보는 것은 침소봉대다. 주류 언론의 보도와 달리 SNC는 시리아 혁명에서 그리 의미 있는 영향력이 없다. 사실상 거리 시위와 노동자 파업 운동은 각 지역의 지역조정위원회(LCC)들이 이끈다. LCC들은 SNC의 통제를 받지 않고 처음부터 서방 개입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리아 민중이 리비아 경험에서 잘 배웠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SNC의 약한 영향력은 서방 제국주의의 전략에 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혁명을 돕더라도 그것이 자신들에 유리한 결과를 낳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다.

제국주의 지배자들의 곤란한 처지는 얼마 전 리비아에서 일어난 미 영사관 공격에서 잘 드러났다. 직접 개입한 리비아에서도 서방은 의도한 바를 제대로 얻지 못한 것이다. 그나마 리비아에서는 친서방적인 리비아과도국가위원회(NTC)가 저항 세력 내 영향력이 꽤 있었는데도 그랬다.

또한 저항 세력이 주로 경화기로 무장

한다는 점, 저항 세력이 통제하는 지역은 극심한 물자 부족에 시달린다는 점을 보면, 서방의 ‘지원’이라는 것이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서방 제국주의가 어떻게 해서든 시리아 혁명을 굴절시키려 노력하고 있고, 이는 시리아 민중에게 재앙적 결과를 낳을 것이므로 우리는 서방 개입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서방 개입 반대와 시리아 혁명 지지를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는 시리아 민중의 ‘자발적’, ‘평화적’ 운동은 지지하지만 ‘무장 투쟁’은 경계하며 반대하는 관점이다.

노동자 파업 같은 행동이 전국적으로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쟁이 군사력 대결 양상으로만 흐른다면 평범한 사람들이 운동에 광범하게 동참하지 못하고 혁명이 고립돼 패배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탱크, 장갑차, 헬기 등을 동원하는 정권의 탄압에서 운동을 지키려면 ‘무장 투쟁’이 불가피하다. 무장은 혁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SNC 등의 부추김으로 무장 투쟁이 시작됐다고 보고 평화 시위와 무장 투쟁을 가르는 것은 현학적 논다.

넷째는 저항 세력 내 이슬람주의 요소에 반대하며 ‘반근본주의’를 혁명의 주요 슬로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관점이다. 이슬람주의의 보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감의 표현이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왜 이슬람주의가 중동에서 주요한 저항 사상이 됐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또한 서방 제국주의 지배자들이 유포하는 이슬람 혐오증을 일부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더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무슬림형제단이 주도하는 SNC는 혁명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작은 것을 크게 부풀려 슬로건으로까지 격상시키려는 태도는 종파주의로 흐를 수 있다.

시리아 혁명이 이집트 혁명을 포함한 중동 민중 반란의 일부임을 이해하며 시리아 혁명을 분명히 지지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차승일

마리카나 승리 이후

남아공 곳곳에서 노동자 파업이 물결치고 있다

사히드 모하메드 남아공 노조 활동가

남아공 론민 백금 광산에서 일하는 마리카나 광원들이 22퍼센트 임금 인상을 쟁취하자, 이제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고 있다.

9월 24일에 운수 노동자 2만 8천 명이 “마리카나! 마리카나!”를 외치며 남아공 전역에서 파업을 벌였다. 이는 지난 8월 마리카나에서 학살된 노동자 34명에 대한 최고의 헌사였다.

다음 날인 9월 25일에는 수천 명의 화물트럭 운수 노동자들이 요하네스버그를 가로질러 행진했고, 광산 및 운수 노동자 10만 명이 작업을 거부했다.

최근 에르멜르 석탄 광원들도 파업에 동참했다. 경영진이 22퍼센트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동자들은 인상이 너무 낮다며 이를 거부했다. 무이누이 지역 크롬(금속의 일종) 광원들도 9월 28일에 월 임금 1만2천5백 란드(1백 20만 원)를 요구하며 경도 접거 농성에 돌입했다.



저항하는 남아공 노조원들

파업에 참가한 남아공 운수 노동자들

다른 노동자들은 이보다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면서, 월 임금이 1만6천5백 란드(약 2백15만 원)가 점차 금광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요구가 되고 있다.

쟁점은 임금만이 아니다. 지역공동체들이 자신들의 토지를 특권적으로 사용해 온 광산업체들에 맞서기 시작했다. 지

역민들은 종족 지도자들이 땅을 떠나라고 회유하며 건넌데 뇌물도 거부하고 있다.

9월 28일 림포포 지역 광산공동체 노동자들은 세계 최대 백금 광산업체인 앰플라츠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광산업체한테 자신들의 땅에서 즉각 떠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자신들은 마리카나 노동자들에 연대해 투쟁한다고 말했다.

이런 저항은 남아공 이웃나라인 나미비아로도 확산되고 있다. 나미비아 세 지역(오토지하세, 웨덜리, 마치리스)의 광원들이 마리카나 노동자들이 제시한 선언문을 자신들의 요구로 채택하고 파업에 나서고 있다.

불꽃

코사투(남아공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는 저항의 불꽃을 꺼뜨리고 운동을 통제하려고 필사적이다. 코사투 사무총장 즈웰린지마 비비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너무 낮다고 말하면서도, 불법 파업으로는 저임금을 개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광원노조(NUM)와 일부 코사투

노조 지도부는 군벌과 강패들이 마리카나 파업을 지도했다며 파업 노동자들을 비방했다.

그러나 코사투 소속의 상당수 평조합원들은 진실을 알고 있다. 마리카나 광원들이 자신들과 똑같은 노동자이며, 고용주가 수천 억 달러를 챙기는 동안 극도로 위험한 노동 조건과 저임금으로 고통받았다는 진실 말이다.

마리카나 노동자들은 가맹 노조와 상관없이 운수 노동자, 광원 그리고 공동체들이 함께하는 공동파업위원회를 제안하고 있다. 또, 부패한 노조 지도부를 노동자 총회에서 선출한 위원회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퍼지고 있다.

도둑질을 일삼는 광산업주들을 체포하고, 도둑질을 허용한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 50년 넘게 빼앗긴 지역의 토지도 지역공동체가 되찾아야 한다. 노동자들이 광산을 스스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 이것은 단지 노동조합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맞서는 문제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커> 2323호 / 번역 최용찬

국제적 연대를 보낸 한국 진보진영

9월 27일 한국의 노동조합, 인권·사회운동 단체들이 마리카나 광원들의 투쟁에 연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남아공 노동자들에게 힘을 보탰다.

한국의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싸우는 남아공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고, 마리카나 학살 등 극심한 탄압을 일삼는 남아공 정부를 규탄했다.

성명서에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노동조합과 인권단체 연석회의 등의 인권단체 그리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노동자연대다함께, 진보전략회의, 국제노동자교류센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좌파노동자회 등의 사회운동 단체들이 함께했다.

범죄와의 전쟁? 범죄와의 공생!

보수 언론들은 연일 흉악 범죄를 경정적으로 보도하면서 바로 우리 곁에 살인범들이 살고 있을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고조시킨다. <조선일보>가 평범한 청년의 사진을 '나주 성폭행 사건' 범인이라며 1면에 실는 오보를 터뜨린 것은 언론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 비극적인 사건들을 얼마나 이용하고 싶어 안달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처럼 언론, 정부, 보수 정치인, 경찰과 검찰 등 지배자들은 범죄를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한껏 이용한다.

지배자들이 범죄를 부각시키며 얻는 가장 큰 이득은 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태도를 보일 때마다 '반사회적 분자들에 맞서 약자를 보호한다'는 자신들의 거짓을 광범한 사람들에게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을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질서'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위축시키는 데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대선이 다가올 때마다 우익들이 강력범죄 소탕을 단골 메뉴로 사용하는 것은 강력범죄라는 '공공의 적'에 맞서 싸울 테니 자신들에게 권력을 달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다.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범죄자가 우리 주변에 살고 있어서 '범죄와의 전쟁'을 부르짖는 것일까? 경찰청이 발표한 지난해 범죄 통계를 보면 살인, 강도, 강간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전체 인구의 0.048퍼센트이고, 이 가운데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0.00087퍼센트다.

사실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은 흉악 범죄보다 실업, 해고, 복지 삭감, 파산, 연금 고갈, 건강 등의 문제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산다.

공생

'범죄와의 전쟁'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90년 노태우의 '범죄와의 전쟁'이다.

당시 노태우 정권이 대대적으로 홍보한 '범죄와의 전쟁'이 진정으로 노린 것은 조직 폭력배가 아니라 정권 위기 상황 모면이었다.

범죄와의 전쟁 3년 전, 1987년 6월 항쟁과 7·8·9 노동자 대투쟁은 군부독재를 물려서게 만들고 임금과 노동조건을 비약적으로 개선하고 노동운동을 발전시켰다.

당시 지배자들은 걱정도 휩싸이긴 했지만 높은 이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1989년 상반기에 접어



2009년 1월 20일 이명박 정부의 공안통치가 빚어낸 용산 참극 지배자들은 흉악 범죄에 대한 공포심을 부추겨 경찰력을 강화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지배자들이 범죄를 부각시키며 얻는 가장 큰 이득은 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태도를 보일 때마다 '반사회적 분자들에 맞서 약자를 보호한다'는 자신들의 거짓을 광범한 사람들에게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들면서 고도성장의 배경이 됐던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의 '3저 호황'이 끝났고, 국제수지는 적자로 돌아서고 경기는 급속히 후퇴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경제 상황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압력에 밀려 부분적 양보를 통해 노동자 투쟁을 체제 내로 흡수하려던 노태우 정권의 초기 의도를 좌절시켰다.

노태우는 이때부터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했고, 1989년 봄 '좌익 폭력 세력 척결'을 앞세운 '공안 합수부'를 구성해 울산 현대중공

업 파업 등에 경찰은 물론 군대까지 투입했다.

노태우 정권은 1990년 1월 22일 김종필과 김영삼을 끌어들이 이른바 '3당 합당'을 해 1988년 4월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이룬 국회를 여대야소로 바꿨고, 즉시 '민주화' 조치들을 하나씩 거둬들였다.

1990년 들어 보안사가 민간인들을 사찰하고 있다는 것을 윤석양 이병이 폭로한 것을 계기로 대규모 저항 운동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자 노태우는 수만 명이 모여 보안사 사찰 규탄 집회를 하던 바로 그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즉시 대학과 노조에 대한 탄압이 더욱 강화되고, 모든 외근 경찰관에게 총기를 휴대해 해 총기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잇달았다.

노태우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단행하고 헌병 8백70명을 동원해 서울 시내 20개 지역에서 M16 소총을 지닌 채 순찰 활동을 벌인 결과는 조직 폭력배 소탕이 아니라 시위에 참가한 명지대생 강경대를 최파이프로 때려 죽인 것이었다.

이명박 정권은 감히 노태우처럼 군대까지 동원해 공격할 수는 없었다. 우리 운동이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죄를 이용해 정치 위기를 상쇄하려는 의도는 매한가지였다.

이명박 정권은 2009년 1월 용산에 가

난한 철거민들의 허름한 망루를 경찰 1천4백 명과 경찰 특공대, 헬기까지 동원해 공격했다. 전쟁을 방불케 한 진압 작전으로 결국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즉시 항의 운동이 시작됐고 정권은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다.

용산 참사 나흘 후 군포 연쇄살인의 범인 강호순이 잡혔다. 정권은 즉시 이 흉악한 범죄를 자신들의 위기를 벗어나는 데 이용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이 경찰청에 보낸 공문은 "촛불 시위를 확산하려는 반정부 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 연쇄살인사건'의 수사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용산참사로 빚어진 경찰의 부정적 프레임을 연쇄살인사건 해결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주문했다.

악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김대중 정부는 신창원이 탈옥했을 때 이를 빌미로 전국에 대대적인 검문 검색을 강화했고 그 결과 신창원뿐 아니라 당시 민주노총 총파업을 이끌었던 활동가 수십 명이 구속됐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강력 범죄 소탕 1백일 작전'을 선포하고, 조직 폭력배를 소탕하기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를 노태우 정권에 이어 13년 만에 다시 만들었다. 노무현이 '조폭 검거령'을 내린 것과 같은 시기에 '전국 경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는 "그동안 시위 현장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며 시위대가 30분 이상 도로를 점거할 경우 곧바로 진압부대를 투입한다는 결정을 발표하기도 했다.

선거가 다가오면 우익들은 사회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을 통해 승리하는 고전적 방법을 다시 들고 나온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니다. 새누리당 세력은 자신들이 정권을 쥐고 있던 1997년 대선을 앞두고 학교 폭력 문제를 크게 부각했다. 당시 검찰은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올해 4월 총선 직전 학교 폭력이 부각됐을 때 다시 이 '운동'이 등장했다)에 앞장섰다. 이른바 '일진'이란 말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것도 이때였으며,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진보적 매체들까지 청소년 유해 매체로 공격했다.

그럼에도 당시 한나라당 세력은 선거에서 패배했다.

지금 이명박과 우파가 처한 위기와 모순도 깊어서 그들이 외치는 '범죄와의 전쟁'의 악발이 얼마나 통할지는 의문이다.

김태현

서평 | 《왜 마르크스가 옳았는가》

새로운 사회주의 세대를 위한 무기

다음과 같은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던가? 마르크스주의와 상관 없는 이런 말을 말이다.

마르크스주의는 독재로 이어진다. 마르크스주의는 사람을 기계 부속품으로 격하시킨다. 마르크스주의의 이상주의적 태도 때문에 인간 본성을 무시하게 된다. 마르크스주의는 폭력을 신봉하기까지 반민주적이다. 마르크스주의에 따르면 모든 게 다 국가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

테리 이글턴은 《왜 마르크스가 옳았는가》에서, 이런 주장들을 유쾌하면서도 열정적으로 비판한다.

이 책은 인용문이나 왕창 달아서 마르크스를 지루하게 방어하는 책이 절대 아

니다. 마르크스주의에 충실하면서도 교조적이지 않다.

테리 이글턴은 마르크스주의가 정말로 끝났다면 얼마나 훌륭한 일이겠냐며 능청스럽게 묻는 말로 책을 시작한다. 마르크스주의가 정말로 끝났다는 것은 자본주의가 없어지고 인류는 다른 사회체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니 말이다.

이글턴은 진짜 몽상적인 사람들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는 체제라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한다.

물론, 마르크스 자신이 자본주의의 경이로움을 찬양하긴 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진정으로 경이로운 점은 자본주의가 그 자신의 무덤을 파는 사람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자본주의의 희생자인 동시에 자본주의의 부를 전제를 위해 쓰도록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서가

이글턴은 책에서 마르크스에 대한 다른 오해들도 다루고 있다. 흔히들 마르크스가 결정론적이었다고, 즉 노동계급의 승리가 필연적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게 사실이면, 투쟁으로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점을 마르크스가 왜 그렇게 많이 말했겠는가?

마르크스는 혁명과 민주주의를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마르크스는 광범한 대중

이 공공의 일을 통제함으로써 국가가 소멸되기를 바랐다.

개성에 대해서라면, 자본주의야말로 모두의 개성을 하향평준화한다. 마르크스에게 있어 사회주의의 목적은 상호 협력적인 발전을 토대로 개인들의 개성이 만개하는 것이었다.

그 밖에도 이글턴은 '마르크스주의에 인간 본성이나 도덕에 대한 개념이 있나?', '토대와 상부구조의 관계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같은 까다로운 쟁점들을 명확히 규명한다.

이 책은 사회주의자들이라면 꼭 서가에 꽂아둬야 할 훌륭한 책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258호 / 번역 김인수



《왜 마르크스가 옳았는가》, 테리 이글턴 지음, 길 2백35쪽, 1만 7천원



10월 1일에 타계한 에릭 홉스봄은 20세기 최고의 역사학자로 손꼽히는 인물이었다.

홉스봄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년기를 보낸 뒤 가족과 함께 베를린으로 이주했다. 최근 그는 히틀러가 집권하기 전의 독일 생활에 관한 생생한 회고록을 집필했다. 그때 이미 공산주의자가 된 홉스봄은 침대 밑에 등사기를 숨겨 놓고 지냈다고 한다.

홉스봄 일가는 이후 영국으로 이주했고(그의 아버지는 영국인이었다) 젊은 홉스봄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했다. 그는 이후 평생 영국에서 살았지만 청소년기의 이주 경험은 그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홉스봄은 자신의 난민 시절을 회고하면서 “아직도 나는 나라를 받아 줄 가장 가까운 나라로 당장 출국할 수 있을 정도의 현금과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마음이 약간 불편하다”고 썼다.

그는 또 1970년대 인도·파키스탄계 케냐 난민들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영국 이민국 관리들을 보면서 [이민 문제를 - 옮긴이] 주로 평등과 추상적 시민권의 문제로 바라보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깊고 본능적인 공포감”을 느꼈다고 한다.

1947년부터 홉스봄은 런던 버벡 대학(Birbeck College)에 재직했다. 학자로서 그는 크게 성공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서와 논문을 여러 편 썼다.

홉스봄은 자신이 연구하는 ‘시대’에 파묻힌 채 인류사의 나머지 시기에 대해서는 무지한(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는 더 무지한) 상투적인 역사학자가 결코 아니었다.

17세기 봉건 사회에서부터 페루의 토지 점거와 19세기 초 유럽의 비밀 결사까지 넘나드는 그의 연구 범위는 실로 엄청나다.

그의 4대 저서인 《혁명의 시대》, 《자본의 시대》, 《제국의 시대》, 《극단의 시대》는 바스티유 함락에서 베를린 장벽 붕괴에 이르기까지의 세계사를 망라한다. 누구든 그의 4부작을 읽으면 값진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홉스봄은 단 한 번도 역사를 역사학자들의 전유물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학술적 저서와 논문 못지않게 수많은 대중적 글을 〈가디언〉, 〈뉴 스테이지 먼〉, 〈런던 리뷰 오브 북스〉 등의 매체에 기고했다.

많은 유명 역사가들과 달리 홉스봄은 학자로서의 지위를 악용해 자신이 아무 것도 모르는 주제에 관해 이러쿵저러쿵 떠벌리는 짓은 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데 역사가 도움이 된다고 믿었고, 따라서 역사에 근거한 주장들이 역사 학도만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청중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홉스봄은 역사학자 이외에 다른 인격도 있었다. 미국 문화가 공산주의자들에게 불신 당하던 시절에 그는 재즈 평론가로서 프랜시스 뉴튼이라는 가명으로 〈뉴 스테이지 먼〉에 글을 썼다. 그러나 홉스봄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홉스봄 또한 로큰롤 음악에는 좀처럼 적응하지 못했다.

평생 공산주의자로서 살다 간 에릭 홉스봄은 1936년에 영국 공산당에 가입해 당이 해체된 1991년까지 당적을 유지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파들은 이 점을 이용해 그의 연구 업적을 깎아 내리려 했다.

2008년 보수당 대회에서 마이클 고브(현 영국 교육부 장관)는 “홉스봄이 사악한 이데올로기에 봉사해 온 지난 세월을 눈물로 참회하지 않는 이상 그의 말은 전혀 들을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전혀 들을 가치가 없다는 말은 마이클 고브 자신에게 훨씬 더 어울리는 말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에릭 홉스봄을 추모하며

저항 정신을 잃지 않았던 역사가

향년 95세의 나이로 타계한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의 삶을 **이언 버철**이 되돌아본다. 이언 버철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당원이고 역사가다. 국내에 번역된 저서로 《서유럽 사회주의의 역사》(갈무리), 《뼈딴이를 위한 레닌 가이드》(노동자연대다함께) 등이 있다.



에릭 홉스봄의 4대 저서 중 하나인 《혁명의 시대》(한길사)

이런 유치한 비방은 간단히 무시해도 된다. 그러나 홉스봄에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스탈린주의의 문제

홉스봄의 공산주의 신념과 마르크스에 대한 존경심은 대체로 그의 연구에서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홉스봄이 사회의 경제적 토대와 계급 관계를 볼 수 있었던 것도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덕분이다.

그러나 스탈린주의 버전의 공산주의에 대한 그의 충성심은 부작용도 낡았다. 일찍이 파시즘을 경험한 그는, 노동운동과 친자본주의 정당들 간의 동맹을 뜻하는 ‘인민전선’만이 파시즘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라고 확신하게 됐다.

그런데 1930년대 프랑스와 스페인에

서는 바로 이 전략 때문에 혁명적 잠재력이 억눌리고 파시즘의 승리를 향한 길이 열렸다. 그럼에도 홉스봄은 평생 인민전선 전략에 집착했다.

때로 이 점은 그의 연구 성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는 노동계급의 투쟁성이 최고점에 달한 사건들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컨대 《자본의 시대》에서 홉스봄은 마르크스가 노동계급의 가장 위대한 성취로 손꼽았던 1871년 파리코뮌을 고작 몇 문단으로 깎아내린다.

1956년에 홉스봄은 러시아가 헝가리 혁명을 짓밟은 것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지했다. E P 톰슨과 크리스토퍼 힐 등 영국 공산당의 유명한 역사가들 중 다수가 이 사건을 계기로 탈당했지만 홉스봄은 잔류했다.

2006년에도 그는 〈런던 리뷰 오브 북

스〉 지면에서 크리스 하먼(2009년에 작고한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과 나와 논쟁하면서 헝가리 노동자 평의회가 헝가리 혁명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헝가리 혁명 참가자들과 목격자들 다수의 증언과는 다르게도 말이다.

1960년대에 홉스봄은 새로운 운동의 부상에 잠시 감명받은 듯했다. 피터 빈스와 타리크 알리 등 신좌파가 옥스퍼드에서 조직한 최초의 베트남 전쟁 반대 강연에 연사로 참여하기도 했다.

1968년에 그는 혁명적 신문인 〈블랙 드위프〉에 글을 썼다. 그는 프랑스 총파업을 “경이롭고 매혹적”이라고 묘사했고 프랑스 공산당이 “급뜨게 움직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자신의 본래 성향으로 되돌아갔다.

홉스봄의 가장 두드러진 정치적 개입은 1978년에 행한 ‘노동운동의 중단된 전진’이라는 제목의 강연이었다. 여기서 그는 전투적 산업 투쟁이 사회주의와 별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경제주의적 노동조합 의식은 때로 노동자들의 연대를 자아내기보다는 오히려 노동자들을 서로 반목시킬 수 있다”고 그는 썼다.

그로부터 4년 뒤 홉스봄은 노동계급의 역사적 구실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을 드러내 놓고 비판했다. “전통적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의 중심 기반이었던 육체 노동자 계급은 이제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축소되고 있다.

“이 계급은 1939년의 고소득자들조차 꿈꾸지 못했을 정도로 생활수준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변화를 겪었고 어느 정도는 분열되기도 했다.

“이제 더는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의 계급적 상황 때문에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의식이 발전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없다. 비록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는 있지만 말이다.”

홉스봄은 새로운 노동계급의 출현을 보지 못한 채 “노동계급”을 역사의 특정 시기에 국한된 개념으로 이해한 듯하다.

그의 주장은 결국 공산당의 몰락을 부른, ‘유로코뮤니스트’로 알려진 노골적 개혁주의자들과 강경 스탈린주의자들 사이의 논쟁을 촉발하는 데 일조했다.

그러나 홉스봄의 견해는 공산주의 운동 진영을 훨씬 뛰어넘어 영향력을 미쳤다. 1982년 영국 노동당 대회에서 당 지도자였던 닐 키녹은 “현존하는 가장 현명한 마르크스주의자”라며 홉스봄을 찬양했다. 산업 투쟁에 반대하는 그의 주장이 노동당을 우경화시키려던 키녹의 의도에 잘 들어맞았던 것이다.

말년의 홉스봄은 러시아식 ‘사회주의’에 갈수록 비판적인 입장이 돼 갔다. 《극단의 시대》에서 그는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고 정치 체제에 대해서는 좋게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홉스봄은 비록 자본주의의 해악을 잘 알고 있었지만 무엇이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감은 없었던 듯하다. 2007년에 열린 〈세계화, 민주주의, 그리고 테러〉 회의에서 그는 인류가 역사의 새로운 국면에 돌입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홉스봄은 애초에 그를 공산주의자로 만들었던 저항 정신만큼은 결코 잃은 적이 없다. 젊었을 때 학술적 어법에 연연하기에는 너무 연로해진 그는 2008년에 향후 영국사에서 민족주의가 득세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역사의 임무는 결국 민족주의적 신화에 통침을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홉스봄의 연구 업적에는 비판할 부분이 많다. 그러나 그의 연구의 다른 많은 부분은 앞으로도 마이클 고브 같은 자들에게 통렬한 “통침”을 날릴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3호 / 번역 천경록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10월 17일(수)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Report@left21.com

쌍용차 해고자 고동민 씨 인터뷰

“5개월 동안 죽음이 멈춘 것에서 희망을 봅니다”

“쌍용차 청문회는 3년 전부터 제기된 의혹이 진실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불법적인 정리해고였다’, ‘회계 조작 가능성이 농후하다’, ‘부당한 과잉 진압이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회계조작과 정리해고에 동참했던 모두가 한통속으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뻔뻔함이었습니다. 그저 실수였다고, 정리해고로 22명이 죽은 것은 아니라고, 테이저건을 쏘지만 빔빔했다고, ‘사회적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쌍용차 대표이사나 경찰청장까지 했던 인물들이 후안무치한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게 있습니다.

외교부 문서에서 드러났듯이, 상하이자동차가 기술 유출을 회피하기 위해 ‘기획부도’를 냈고, 경영진들이 회계조작을 통해 이를 정당화했고, 정부·산업은행·법원·검찰·경찰 등이 정리해고의 당위성을 제공했습니다.

2008년 경제 위기로 지배자들은 위기감을 느꼈고, 쌍용차에서 노동자의 절반을 해고하고 짐승처럼 진압하며 가시적 효과를 내려 한 것입니다. 노동 유연화, 노조 죽이기를 통해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 표명이었던 것입니다.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평택시장이 민주당이지만 별반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공공근로 제공



최영호 기자

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지금 쌍용차 문제만이 아니라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동조합 탄압 문제를 풀 수 있는 유력한 대선 후보가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요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후보는 불합격입니다.

사회적 연대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겠지만, 정작 노동자들을 만나 할 얘기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전태일 재단을 방문해 위로나 사과도 아니고 그저 ‘얼마나 상심이 크시냐’ 하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해법을 제시할 능력도,

생각도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물어 주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해고자와 무급차 복직은 쉬운 문제입니다. 정부가 지원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 정부나 정치인들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마힌드라는 2013년에 무급자를 복직시키겠다고 얘기해 왔지만, 이조차 2016년이 돼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고자 전체를 복직시키는 데 1년에 4백억 원도 들지 않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인건비는 10퍼센트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를 풀 방법은 대중투쟁입니다. 어렵지만, 투쟁만이 진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한문 투쟁 이후 5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도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희망의 근거입니다.

그동안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22명의 죽음에 가슴 아파했던 시민들이 함께 연대하면서 쌍용차 문제가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문 분향소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 탄압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의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가 희망버스처럼 사회적 연대로 확대될 때, 정치권도 무서워서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인터뷰·정리 유병규

철도노조

민영화 위한 역·기지 회수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가 다음 정부로 넘어가는 듯하던 KTX 민영화를 위한 수순을 다시 밟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철도공사 소유의 역사 3백45개와 차량기지 23개 등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KTX가 민영화 되면 민간 사업자에게도 제반 시설물을 임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당장 철도공사의 자산은 5조 5천억 원이나 줄어든다. 철도공사의 부채 비율은 1백30퍼센트에서 3백85퍼센트로 대폭 늘어난다. 이것은 철도공사의 부실을 발미로 한 민영화·구조조정 압박이 더 커질 수 있음을 뜻한다.

실제로 철도 노동자들은 역·기지 회수가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며, 구조조정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여기고 있다.

이미 올해까지 5천1백15명의 인력 감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제 구조조정의 칼날이 훨씬 거세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다시금 민영화 카드를 꺼내든 것은 차기 정권에서 곧바로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해도 사전 정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도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공기업 매각을 촉구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런 정부의 도발에 당황한 듯했지만, 신속하게 투쟁 대열을 갖추고 있다. 10월 4일에는 확대쟁대위 회의를 열어, 국토해양부가 시설물 회수를 강행하면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노조가 지난 6개월 동안 KTX 민영

화 반대 투쟁을 적극 조직해 왔던지라 간부들과 활동가들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근 76.6퍼센트의 높은 지지로 입단협정을 결의하고, 현장 투쟁이 확대돼 온 것도 자신감의 밑천이 됐을 것이다. 고무적이게도 직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1천5백여 명을 조직한 것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

정부와 박근혜의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에게 불리하지 않아 보인다.

갈팡질팡

당장 노조가 전면 파업 돌입을 선언하자, 노동부는 그동안 외면해 온 해고자 복직 등 단체협상 중재안을 제시하며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정부는 10월 5일로 예정했던 역·기지 회수 심의도 일주일 뒤로 연기했다.

이것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갈팡질팡할 때,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싸운다면 승산이 있음을 보여 준다. 폭넓은 단체들과 함께 KTX민영화저지범대위를 만들어 꾸준히 홍보전 등을 진행하며 여론을 환기시켜 온 것도, 정부의 갑작스런 공격 시도에 맞서는 데 도움이 됐다.

물론, 정부는 쉽게 민영화 추진 의지를 꺾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굽힘 없이 투쟁을 건설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철도노조 쟁대위가 결정한다면, 만약 정부가 역사와 차량기지 회수를 강행한다면 전면 파업으로 맞서 정부를 좌절시켜야 한다.

이정원

공무원노조

총회 성사로 투쟁을 건설하자

10·20 전국공무원노조 총회가 성공적으로 조직되고 있다.

전국의 현장 간부들이 총회 성사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이런 노력이 비조합원까지 투쟁기금을 납부하고 총회에 참여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공무원의 실질임금을 삭감하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했다. 노조 설립 신고를 세 번이나 거부했고,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를 금지했고, 노조 사무실조차 강제 폐쇄했다. 민중의례를 금지했고, 진보정당 후원을 이유로 많은 동지들을 기소하기도 했다.

임금 인상, 해고자 복직, 노조 인정, 정치 자유 보장 등 우리의 요구는 매우 정당하다.

공무원의 노동조건과 보수는 전체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저항과 정치 활동을 가로막으려는 부당 해고도 당장 철회돼야 한다.

이런 탄압에 대한 분노와 억눌려 왔던 요구들이 대선과 맞물려 총회에 대한 호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총회에선 대선 후보들을 불러내 우리의 요구에 대한 약속도 들으려 한다.

그런데 박근혜까지 부르자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 박근혜는 우리를 탄압해

온 이명박 정부를 계승하는 후보다. 그녀는 독재자의 딸이자 유신 옹호자로, 결코 환영할 수 없는 인물이다.

해직자 원직복직을 위해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도 정부·여당의 위기를 활용해 투쟁과 지지를 확대하며 저들을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전임 정부 때 우리를 탄압했던 민주당에 대해서도 당연히 비판도 삼가지 말아야 한다.

지금도 보수언론은 틈만 나면 공무원 연금에 시비를 거는데, IMF 위기 때 그랬듯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연금을 포함한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구조조정이 확대될 수 있다.

유럽에서 정부의 성격과 관계없이 경제 위기 속에서 공무원 임금 삭감이 진행되고 있고 이에 맞선 투쟁이 건설되고 있다.

따라서 일부 대선 후보자들의 약속에 수동적으로 기대를 거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없다. 활동가들은 무엇보다 지금의 상황을 활용해 조합원의 자신감과 투쟁력을 고무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모두의 희망과 바람을 결집시켜 대규모 총회를 성사시키고, 이를 디딤돌 삼아 우리의 조직력을 키우며 투쟁을 건설해 나가자.

양윤석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이화의료원

이화의료원 파업이 남긴 것

10월 2일, 이화의료원 파업이 28일 만에 끝났다. 노조는 임금 3.7퍼센트 인상, 만 6세 아동에게 월 7만 원 보육수당 지급, 고소고발 취하 등에 합의했다.

이런 합의 내용은 원래 노조의 요구와 비교하면 다소 부족하고 아쉬운 결과다. 파업 기간 동안 임금 보전 약속도 받지 못했다. 특히 이화의료원이 서울 사립대 병원 중 임금이 최하위였는데, 이번 파업으로도 이 명예를 벗진 못해 노동자들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그룹에도 대의원들은 잠정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지지했다.

사측은 임금 인상은 없다며 강경하게 버텼고 노조파괴 전문가 창조건설팅을 끌어들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막판에는 협상장에 나와 임금 인상에 합의하고 산별노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창조건설팅의 악랄한 실체가 청문회에서 폭로되고, 에스제이엠 노동자들이 노조 파괴 시도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는 등 사회적 압력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진보 국회의원들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도 연대하며 힘을 보탤다. 이화여대 학생들과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지를 끌어낸 것도 사측을 압박한 한 요인이었을 것이다. 이화여대 총학생회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이대모임 등은 파업 지지 활동에 적극 참가했다.

연대 확산 덕분에 파업 중반 이후로 부자 재단의 터무니없는 고통전가 실패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또, 비록 파업 참가율이 높진 않았지만,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1백50명가량은 28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탈 없이 대열을 유지했다. 6년 만에 파업에 나서면서 파업 참가 조합원들 사이의 응집력이 커진 것도 성과다.

과제

그러나 이번 파업은 약점과 과제를 보여 주기도 했다.

우선, 로비농성을 유지하긴 했지만 병원의 핵심 인력인 간호사 조합원들의 파업 참가가 미미해 업무 마비 효과가 거의 없었다. 필수유지업무제로 결림돌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피한 결과는 아니었다. 파업 첫날 몇몇 병동의 간호사들이 동참했다가 사측의 통제 때문에 파업에 참가하지 않게 됐고 대체인력도 일부 투입됐는데, 이런 파업 파괴 행위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무엇보다 보건의료노조 산별 투쟁이 이화의료원에만 국한된 것이 한계였다.

이화의료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특히 더 열악하긴 하지만,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은 보건의료 노동자 전체의 염원이며 산별교섭의 핵심 요구였다.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는 산별 교섭을 복원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그것을 실질적으

로 강제할 산별 투쟁과 파업을 건설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주요 대학병원 사측이 산별 교섭에 응할 리는 없을 것이다. 올해도 다른 지부의 조합원들이 이화의료원 파업만 지켜보게 한 것은 아쉽다.

특히 노조 파괴 공작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확산되고 있었고,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문제점이나 병원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등을 쟁점화시키며 산별 파업과 사회적 연대를 확대하기에 유리한 조건이었다.

이번 파업은 ‘병원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는 말이 허구라는 점도 드러났다. 노조 지도부는 2008년 통폐합 직후 임금 대폭 삭감을 수용하고, 마곡에 제2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함께 요구하는 등 병원 살리기에 동조했다. 그러나 사측은 결코 성장의 과실을 노동자들에게 먼저 양보하지 않았다. 허리띠를 졸라맨 노조에게 돌아온 것은 노조 파괴 전 문가 고용이었고, 이번 성과조차 28일간의 투쟁을 통해서 따낼 수 있었다.

아쉬움은 남지만, 이번 파업을 통해 다진 조직력을 바탕으로 아직 성취하지 못한 요구들을 향후에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의 투사들은 이번 파업이 남긴 과제를 잘 돌아보며 조직력을 키우고 연대의 네트워크를 건설해 다음 투쟁에 대비해야 한다.

최미진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10월 17일(수)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Report@left21.com

국민대 ‘부실대학’ 선정 이후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학교 당국에 맞서 투쟁을 확대하자

지난 8월 31일에 국민대가 정부재정 지원제한대학(일명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후 학교 측은 미봉책으로 일관해 왔다.

학교 측은 전임교원 77명 확보, 취업 준비생 3백 명 집중관리로 ‘부실’대학에서 벗어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그동안 학생들이 느껴 온 불만들을 해소하지 못한다.

전임교원 77명을 확보하면 전임교원 확보율이 간신히 ‘부실’대학 선정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여전히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35명 정도로 대학 평균인 26.8명보다 많다. 게다가 최근 학내 자치 언론사의 폭로에 따르면 국민대 당국은 새롭게 채용하는 전임교원의 4분의 3가량을 비정규직인 ‘비정년 트랙’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학교 측은 등록금 대폭 인하 약속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민대는 교과부의 5퍼센트 인하 권고조차 무시하고 등록금을 1.9퍼센트밖에 인하하지 않았고 이

사실이 이번 평가에 반영됐는데도 말이다.

학교 당국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2011년 국민대의 예산과 결산 차액은 2백57억 원이나 됐다. 이 돈이면 학생 1인당 1백80만 원가량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다. 예산을 뺑뺑이로 작성해 적립금을 남겨 먹는 문제를 해결한다면 등록금을 대폭 인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표절 대학’

또 총장은 간담회에서 ‘현재 기존 학교들의 인원을 감축해 학과를 신설하는 등의 계획이 있다’고 언급하며 취업률이 낮은 학과의 입학 정원을 감축할 가능성을 열어 뒀다. 국민대 당국도 교과부처럼 취업률과 수익성 논리에 맞춘 신자유주의 대학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며 학생들에게 고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학교 당국은 국민대를 ‘표절 대학’이라는 오명을 쓰도록 한 문대성 논문 표절 본 심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

다. “피조자자(문대성)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말이다.

이렇게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학교 당국의 태도로는 부실한 교육환경을 제대로 개선시킬 수 없다.

이에 ‘국민대 부실대학 선정 철회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국민대 대책위(가)’(이하 국민대 대책위)가 만들어졌고, 지난 9월 26일 ‘수업환경 개선과 국민대 정상화를 위한 비상학생총회’를 발의했다.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이를 만에 학생 6백50여 명이 비상총회 소집 발의 서명에 동참했다. 서명하면서 “몇 시에 하는 거예요?” 하고 몰으며 참가할 열의를 밝히는 학생들이 많았다.

지난 9월 20일에는 법과대학 학생 3백여 명이 모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해결하고자 법과대학 학생총회를 성사시켰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바람을 완전히 무시하며 비민주적으로 총회를 소집하지 않겠다고 결정했

다. 학생회칙에 따르면 학생 50분의 1(약 2백80명)이 발의하면 총회를 열어야 하고 기존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총회 발의를 요구했지만 총학생회는 기본적인 절차조차 무시했다.

이제까지 총학생회는 단과대 학생회장들과 학교 측이 참여하는 협의 테이블인 복악발전위원회를 통해 해결하자며 비상총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 왔다. 이렇게 학교와의 협상만을 중시하며 학생들을 뜻을 무시한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면 학생들의 힘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9월 10일 총장을 간담회 자리로 불러낸 것도 학생들의 집회와 본부관 항의 농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총학생회의 비민주적인 행동에도 진정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바라는 학생들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집회 등 가능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힘을 모아 갈 것이다.

권혁민 국민대 학생



이들 만에 학생 6백50여 명이 비상학생총회 발의 서명에 동참했다.

독자토론광장

10월 17일(수)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심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립니다.

Letter@left21.com

노동자가 <레프트21>을 ‘강추’하는 이유

이 글은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일하는 한 <레프트21> 독자가 주변 동료, 활동가들에게 <레프트21>을 소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김성수 동지는 이 글을 두 달 동안 고민하고 다듬어서 완성했고, 출력해 대의원실에 부착하기도 했다고 한다. 좋은 글이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정치 권력과 자본에 눈치 보지 않고 그들의 악행과 비리들을 밝혀내는 일에 주저함 없는 언론을 보셨습니까?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바른말을 할 수 있는 언론이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받는 보수 언론의 공격에 맞서 노동자의 편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노동자 단결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전국 유일의 신문인 <레프트21>은, 의식 있는 노동자들의 구독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본과 권력에 발붙은 그들의 나팔수, 보수 언론들을 앞세워 터무니없는 주장들로 노동조합을 공격할 때 우리는 사회적으로 늘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었고 분열과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자본과 권력이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 중의 하나가 바로 언론이었습니

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의 무기”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열을 막아내고 단결의 길로 안내해

줄 우리들의 신문 말입니다.

과거에 어떤 세계적 혁명가가 말하길 “신문이 집단지 선전가·선동가·조직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신문은 독자 자신이 직접 기고자가 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모니터들과 의견 교환 또는 교류 협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신문의 독자가 늘어나서 구독자 단체가 형성되고 커지면 세상을 향해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며 사회적 영향력도 더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언론을 키워시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노동자가 됩니다.

경쟁과 속박의 굴레를 벗어나 진정한 나눔과 소통이 있는 따뜻한 모임 속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의 아래로부터 동질성 회복과 동지적 협동심으로 뭉칠 수 있는 중심, “광범하고 폭넓은 노동자 언론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는 강력히 조직화돼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김성수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조합원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가능하다

흔히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로 시작되는 ‘분배 관계’에 대한 개혁 또는 혁명의 실천 사항 중 하나가 바로 ‘비정규직 없는 사회’일 것이다.

나는 얼마 전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이하 학비노동자)의 교육공무직화 요구안을 담은 서명지를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전 교직원에게 돌렸다. 그 과정에서 나는 소수 몇몇 동료들에게서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부정적 반응을 들었다.

“이거 교육예산 문제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거 아니야? 학교에 비정규직이 얼마나 많은데 정규직화 되면 교육 정책에서 다른 예산이 깎이겠지.”

“(매우 단호하게) 저는 서명하기 싫어요. 예전에 무기계약직 믿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 있는 비정규직을 봤어요. 그 사람들을 무자격으로 정규직화 시키는 건 문제가 있어요.”

물론 나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어디서 비롯했는지 안다. 바로 자본가 관점에서의 ‘분배’ 개념과 지배계급이 사회 구성원들을 동원(착취)하기 위해 퍼뜨리는 이데올로기인 ‘능력주의’에서 나오

는 발언들이었다.

앞서 말한 대로 사람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같이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면 ‘분배 관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인식한다. 가치가 임금과 이윤 중 어디로 분배되느냐는 것이다.

부자 증세

그런데 이것은 분명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이긴 하지만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구조를 봤을 때 매우 소모적인 일일지도 모르겠다. 어차피 자본의 본질은 이윤 추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본가가 생산수단을 독점하는 한 불가피한 결과다.

따라서 진짜 언급돼야 할 “경제민주화”는 ‘분배 관계’가 아닌 ‘생산 관계’에 있다. 자본가와 지배계급이 가지고 있는 생산수단, 생활수단 등을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해야 경제민주화는 가능하다.

물론 여기서 곧바로 ‘생산수단의 노동자 계급으로의 이행’이라는 목표가 실현된다면 혁명이겠지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조세’ 문제 만큼은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학비노동자의 정규직화 가능성은 ‘기존 정규직 노동자의 희생’이나 노동자들 내에서 ‘누구에게 얼마나 더 많이 분배하는가’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부자 감세를 되돌리거나 토건과 국방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여 교육 복지 예산을 늘리고, 그 예산을 늘리기 위해 자본가 입맛에 맞는 세율을 줄이거나 자본가의 세금을 늘리는 것. 바로 이것이 현실점에서 노동자들 간의 아웅다웅 분배 다툼을 뛰어넘는 ‘경제민주화’ 방안이 될 것이다.

나아가 모든 노동자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근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나 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 줄 세우기와 보여 주기를 위한 실적 중심 교육 정책이라는 것을 깨닫고, 공교육의 구조를 혁신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

학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정규직화는 공교육의 구조를 아래로부터 민주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히든카드가 될 것이다.

서지애 전교조 부천 초동지회 조합원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노동자연대다함께 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최 | 노동자연대다함께 www.alltogether.or.kr

* 웹사이트에 포럼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경기지회
동아시아는 어디로? — 독도, 다오위다오, 난사군도 ...
영토 분쟁과 패권 경쟁
연사 : 김영익 (<레프트21> 기자)
일시 : 10월 25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민주노총 경기본부 중회의실
(수원역 지하상가 1번 출구 도보 10분, 매회민주연대 및 골든프라자 5층)
참가비 : 2천 원(학생 1천 원)
문의 : 010-8700-4647

서울 남부지구
박정희의 유신 선포 40년 —
1퍼센트의 꿈을 위한 반동 쿠데타와 저항
연사 : 미정
일시 : 10월 25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모토(강남역 12번 출구 다이소건물 8층)
참가비 : 4천 원(장소 대여비)
문의 : 010-9401-1370

서울 서부지구
유신쿠데타 40년 — 경제 성장을 위해
유신체제는 불가피했는가
연사 : 한규한 (경상대학교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역사전공)
일시 : 10월 25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지하교육장
(홍대입구역 1번 출구 부근, O2제일은행 오른쪽 골목)
참가비 : 2천 원
문의 : 010-7725-9823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격주 월요일 (다음호는 10월 22일)

강남역 11번 출구 저녁 7시 ~ 8시	울산 현대차 4공장 구정문건너편 저녁 6시 40분 ~ 7시 40분
건대입구역 4번 출구 저녁 7시 ~ 8시	건국대 학생회관 앞 오전 11시 45분 ~ 12시 45분
혜화역 4번 출구 저녁 7시 ~ 8시	교려대 정경대 후문 오후 1시 ~ 2시
인현 주안역 남광장 저녁 6시 40분 ~ 7시 40분	한국외국어대 인문관 앞 오후 1시 ~ 2시

격주 화요일 (다음호는 10월 23일)

수원역 지하상가 1번 출구 저녁 7시 ~ 8시	시립대 학생회관 앞 오후 12시 ~ 1시 30분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저녁 7시 ~ 8시	이화여대 포스코관 지하1층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부산대 정문 앞 오전 11시 50분 ~ 12시 50분	국민대 복지관 1층 오후 12시 ~ 1시

“더는 밀릴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는 학교를 멈출 수 있는 우리의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

인터뷰·정리 조명지

